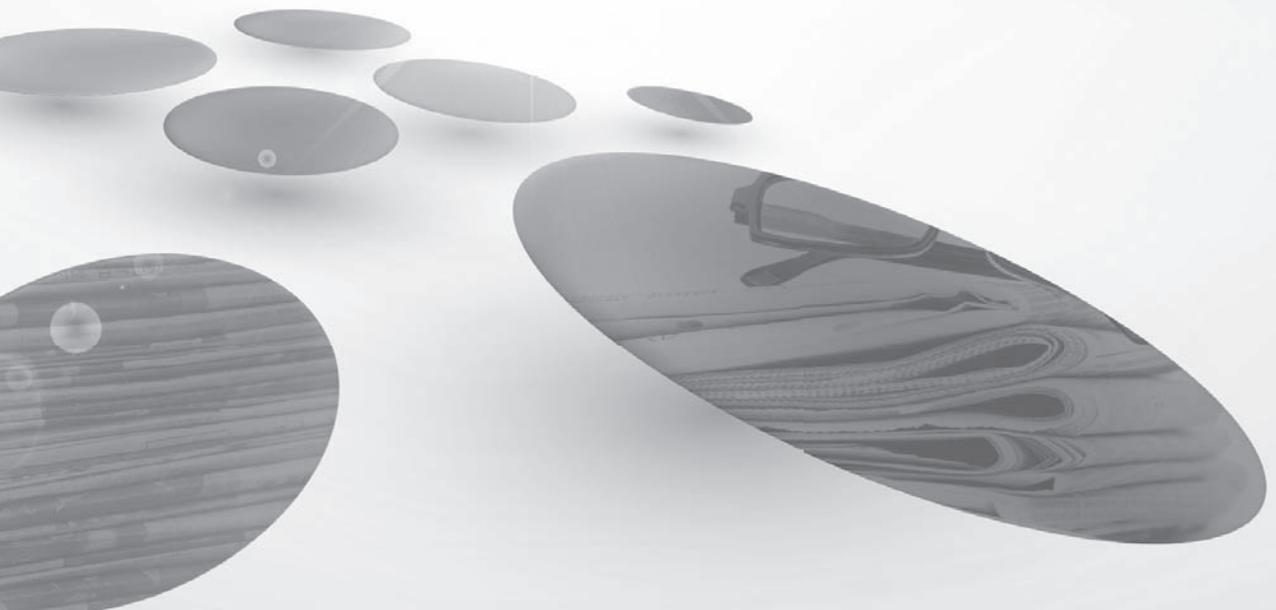




# 보도준칙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 1.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 ▲ 2011-1101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 <주문>

경향신문 2011년 4월 13일자 10면 「‘장자연 리스트’ 이정희·이종걸 의원 기소」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12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조선일보 고위임원이 연루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이종걸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장씨 사건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현직 야당 대표와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이정희 대표는 2009년 4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조선일보 임원이 장자연씨에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은 것처럼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2009년 4~5월 자신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특정 임원이 포함됐다”고 말한 장면을 담은 동영상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선일보가 협박성 서신을 보내왔다는 글을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 등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발

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2009년 조선일보는 자사 임원이 의혹과 무관한데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급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대표와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해당 임원은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됐다.

이 사건은 2009년 3월 텔런트 장자연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자살 전 작성했다는 ‘장자연 리스트’가 폭로되면서 불거졌다. 리스트에는 장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언론계와 재계 유력인사 명단이 적혀 있어 경찰이 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만 폭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성접대 의혹에 휘말린 유력인사들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위 기사에서 서울 중앙지검 형사4부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이종걸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같은 검찰의 조치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두 번째 리드 문장에서 “장씨 사건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현직 야당 대표와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사 어디에도 이 같은 리드 부분의 서술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다.

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하며 특히 스트레이트 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하는 대표적 기사 형식이라고 하겠다.

위 기사처럼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서술하고도 사실 관계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이는 기자의 의견이나 추측을 마치 사실처럼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②항(미확인보도 명시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0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南道日報 발행인 박 성 호
2. 호남매일 발행인 구 양 솔

〈주문〉

南道日報 2011년 4월 4일자 6면 「광주경찰, 황주홍 강진군수 구속영장 방침/피의자 신분 소환 13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기부금품 모집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예정」, 호남매일 4월 4일자 15면 「황주홍 강진군수, “무죄 확신”/경찰 “보강 조사 뒤 사법처리 수위 결정”」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南道日報 호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南道日報)=『경찰이 강진군 장학기금 불법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청 수사2계는 지난 1일 오전 황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11시 30분까지 13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조처한 뒤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른 진술이 필요하다면 황 군수에 대해 2차 소환도 검토할 수 있으나 아직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진군민장학재단 이사장을 검직하고 있는 황 군수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검찰 지휘를 받아 황 군수에 대한 영장신청을 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황 군수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대질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4일 해당 공무원들을 추가로 소환해 보강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황 군수가 200억 원 가까운 장학기금 조성 과정에서 공무원 승진이나 관공공사 수주 대가 등으로 승진 공무원 및 업자에게 장학기금을 반강제적으로 내도록 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강진군은 5급 이상 공무원별로 1억 원의 장학기금 모집 목표액을 설정해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5급 이상 승진자 17명 전원이 평균 495만원씩 장학기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각종 공사·용역·물품 계약과정에서 관련업체 324곳이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지난 5년 동안 645차례에 걸쳐 14억 원의 기부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특히 장학기금 가운데 700만 원이 황 군수 개인통장에 입금되고 황 군수의 지시로 5천만 원의 장학기금이 장학재단에 입금됐다가 체육진흥기금으로 이체돼 장학재산에 재산상 손실을 입혀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 적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며, 황 군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장학기금은 모두 자발적으로 기탁됐고 공무원의 장학기금 모금도 관련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황 군수는 장학재단 기금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체육기금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실수로 체육기금을 장학기금으로 잘못 기탁해 애초 목적으로 이체한 것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는 경찰조사를 마친 뒤 “이번 경찰 소환조사를 통해 충분히 해명해 여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신한다”고 거듭 밝혔다.

황 군수는 앞서 지난 1일 소환 당시 기자회견문을 통해 “돈 안 먹고 열심히 일한 것도 죄가 되느냐. 나와 모든 강진 공무원은 결백을 확신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호남매일)=『강진장학재단 기금 불법 조성 의혹을 받는 황주홍 강진군수가 1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3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서 귀가했다.

황 군수는 광주지방경찰청 4층 진술 녹화실에서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경찰이 과도하게 법을 적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할 얘기 다했다. 결백하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를 받은 황 군수를 상대로 기부금 조성 과정에서 기부금품 출연 강요,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시도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금 조성에 직접 개입해 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는지, 군과 각종 계약을 맺은 기업체 대표들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황 군수는 “군수로서 결코 직권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공무원들의 기부행위는 군청 공무원으로서 당연하며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 기탁금 3천 200만 원 중 2천 500만 원을 장학재단에, 나머지 700만 원은 8개 사회단체에 배분하기로 했는데 직원의 착오로 700만 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황 군수는 2007년과 지난해 각각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5천만 원과 7천만 원의 출처에 대해 5천만 원은 장모에게서 받은 돈이며, 7천만 원은 골프 회원권을 회수한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농협 강진군지부에서 낸 5천만 원이 장학재단이 아닌 체육진흥기금

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농협 측이 실수를 한 것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정 기탁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출두 시간인 1일 오전 10시보다 20분 늦게 광주경찰청에 도착한 황 군수는 “장학기금 조성은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는데 돈 안 먹고 열심히 일한 것도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형사 처벌될 일도 없지만 모든 것을 정정당당하게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들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필요하면 추가 소환 조사할 것이고 여러 가지 혐의점에 대해 주변인물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광주경찰청이 200억대 장학기금 불법조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황주홍 강진군수를 4월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13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귀가시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南道日報은 이 같은 사실과 함께 객관적인 근거와 명확한 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는 황 군수에 불리한 예단을 하고 제목으로까지 부각시켰으나 열흘 뒤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돼 사실상 오보가 되었다.

호남매일은 이와 반대로 “경찰이 과도하게 법을 적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할 얘기 다했다. 결백하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는 황 군수의 말을 본문에 적고 <황 군수, ‘무죄 확신’>이라고 제목을 달아 황 군수를 두둔하는 듯이 보도하였다.

강진 군민들의 황 군수에 대한 여론은 크게 양분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강진군민장학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황 군수가 군내 일부 고교를 전국적인 명문고 수준으로 올려놓아 다수의 군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왔으나 장

학기금 조성 및 사용 방법을 둘러싸고 각종 구설과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군민들의 여론이 양분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환조사 사흘 만에 어느 한쪽을 폄훼하는 쪽으로 성급하게 추측보도하거나 다른 한쪽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이 보도한 것은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날 뿐 아니라 편파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03 신문윤리강령 위반  
전북중앙신문 발행인 이 창 승**

**〈주문〉**

전북중앙신문 2011년 4월 8일자 1면 「Weekly 이슈/의원직 사퇴각오 LH유치 사활 걸라/김지사 삭발 분산배치 전국적 이슈화 정치권 MB퇴진 불사 초강경 대응 빼기 박아야」라고 한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전북중앙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를 위해 전북 정치권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각오하고 사활을 다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LH 분산배치가 무산되면, 도민들의 선출로 당선된 전북 정치인들의 존재 이유가 사실상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일의 도내 의원 긴급 모임에선 일부 의원

이 “사퇴를 각오하고 대응하자”고 의견을 낸 바 있다.<관련기사 3면>

도민들은 분산배치라는 민주당 당론 추진이 무산된 이후, 전북 정치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김완주 지사가 삭발을 전격 단행하면서 LH 분산배치 여론을 전국적 이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도민들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현 정권에 대한, 보다 강한 메시지 및 행동이다. 도내 정치권이 영남권이나 충청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낮았다는 점을 의식해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라는 것이다.

일례로 충청권은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지난 5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범충청권비상대책위와 지역 국회의원, 재경 충청향우회 등 200여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과학을 정치와 지역논리의 볼모로 잡아 과학벨트 입지를 결정한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내 정치권도 만일 LH가 특정지역으로 일괄 배치될 경우 이명박 정부에 대한 퇴진 불사 등의 초강경 대응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도내 의원 10명 전원은 7일 오전 9시45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김춘진 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도내 의원들은 회견에서 “지역감정으로 비화되고 있는 중대 사안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 이전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이 중요하다”면서 “전북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히 “대통령이 면담을 회피하고 합리적 대안인 분산배치가 아닌 경남으로의 일괄배치로 결정한다면 전북도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보도기사 형식을 취하고 있긴 하나 사설·칼럼처럼 해당 신문사

또는 취재기자의 의견을 담았다.

기사의 핵심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가 전북이 살 길이므로 김완주 지사의 삭발을 계기로 전북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걸고 투쟁해 이를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사는 LH를 분산 배치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도, 반대론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정제된 논리도 없이 “LH 분산배치만이 전북이 살 길”이라는 일방적 주장과 이와 맥을 같이하는 외침들을 반복하면서 <의원직 사퇴각오 LH유치 사활 걸라>는 선동적 구호를 주제목으로 달았고, 부제목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MB퇴진 불사 초강경 대응 빼기 박아야>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보도기사에 의견성 제목을 편집한 것은 보도기사의 강력한 호소력에 의지하여 독자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보도와 사적 주장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1-1124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 <주문>

경향신문 2011년 4월 25일자 1면 「강경대 사망 20주기…되살아나는 1991년의 기억/죽음 원하는 사회서 젊은이들 ‘신음’ 여전」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0년 전 이 땅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외쳤던가. 그리고 ‘지금, 여기’ 젊은이들은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1991년 4월 26일 학원자주화 투쟁에 나선 명지대 1학년생 강경대 군(당시 19세)이 전투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졌다.

강군의 죽음은 청년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고, 거리는 “살인정권 퇴진하라”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해 5월 25일 성균관대생 김귀정 씨(당시 25세)가 경찰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압사하기까지 13명의 학생과 노동자 등이 분신, 투신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91년의 봄’이 20년을 맞았다. 4년 전인 87년의 6·10항쟁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가시적 성과물을 거두며 ‘승리의 기억’으로 남았다면, 91년 5월투쟁은 참담한 패배이자 트라우마가 되었다. 당시 청년·학생들의 절규는 “분신·투신에 배후가 있다” “죽음의 굿판을 걸어치워라”는 목소리에 묻혔다. 이후 학생운동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

2011년 봄, 한국 사회는 91년 봄과 얼마나 달라졌는가. 민주적 법률과 제도는 생겨났으되, 민주적 정치·사회 풍토는 자리 잡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를 옥죄며 민주주의의 시곗바늘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권력은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집회조차 몇 차례 불허하며 소통을 거부했다.

‘자본’이라는 새로운 지배권력은 또 다른 형태로 청년들을 억압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높아만 가는 등록금, ‘스펙 쌓기’를 요구하는 사회가 젊은이들을 또다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카이스트(KAIST)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학생 4명이 자살했다. 이들뿐 아니라 2007년 232명, 2008년 332명, 2009년 249명 등 매년 대학생 수백명이 스스로 세상을 버리고 있다.



강경대 사망 20주기... 되살아나는 1991년의 기억

# 죽음 권하는 사회서 젊은이들 '신음'여전

20년 전 이 땅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외쳤던가. 그리고 '지금, 여기' 젊은이들은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관련기사 6·7면

1991년 4월26일 학원자주화 투쟁에 나선 명지대 1학년생 강경대군(당시 19세)이 전투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졌다.

강군의 죽음은 청년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고, 거리는 "살인정권 퇴진하라"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해 5월25일 성균관대생 김규정씨(당시 25세)가 경찰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압사하기까지 13명의 학생과 노동자 등이 분신, 투신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91년의 봄'이 20년을 맞았다. 4년 전인 87년의 6·10항쟁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가시적 성과물을 거두며 '승리의 기억'으로 남았다면, 91년 5월투쟁은 참담한 패배이자 트라우마가 되었다. '당시 청년·학생들의 절규는 "분신·투신에 배후가 있다"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는 목소리에 묻혔다. 이후 학생운동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

2011년 봄, 한국 사회는 91년 봄

과 얼마나 달라졌는가. 민주적 법률과 제도는 생겨났으며, 민주적 정치·사회 풍토는 자리잡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를 옥죄며 민주주의의 시곗바늘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권력은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집회조차 몇 차례 불허하며 소통을 거부했다.

## 20년 전 권력의 폭력 학비 고통·스펙 쌓기 비극의 악순환 '유사'

## MB정부 민주화 퇴행속 시민사회 역할 고민을

'자본'이라는 새로운 지배권력은 또 다른 형태로 청년들을 억압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높아만 가는 등록금, '스펙 쌓기'를 요구하는 사회가 젊은이들을 또다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카이스트(KAIST)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학생 4명이 자살했다. 이 들뿐 아니라 2007년 232명, 2008년 332명, 2009년 249명 등 매년 대

학생 수백명이 스스로 세상을 버리고 있다.

20년 전 젊은이들이 체제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목숨을 내놓았다면, 지금 대학생들은 '선진화'와 '경쟁력'이라는 외피를 쓴 체제의 강요로 외롭게 목숨을 던지고 있다. 명지대 경제학과 4학년 최수지씨(22)는 "강경대 시대에는 보이는 폭력에 대학생들이 고통을 받았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 대학생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과 폭력 : 1991년 5월의 기억>의 저자 김정한 고려대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는 압도적인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위로부터 탈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시민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20년 전의 실패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2회에 걸쳐 91년 봄 그 시절을 짚어보는 것은 20년 그들의 절규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정환보·정희원 기자  
botox@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1년 4월 25일자 1면>

20년 전 젊은이들이 체제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목숨을 내놓았다면, 지금 대학생들은 '선진화'와 '경쟁력'이라는 외피를 쓴 체제의 강요로 외롭게 목숨을 던지고 있다. 명지대 경제학과 4학년 최수지 씨(22)는 "강경대 시대에는 보이는 폭력에 대학생들이 고통을 받았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 대학생들

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강경대 사망 20주기’에 즈음해 경향신문이 내보낸 특집기사들 가운데 1면 머릿기사로 올린 ‘총론’ 성격의 것이다.

기사는 <20년 전 젊은이들이 체제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목숨을 내놓았다면, 지금 대학생들은 ‘선진화’와 ‘경쟁력’이라는 외피를 쓴 체제의 강요로 외롭게 목숨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가 갈수록 높아만 가는 등록금, ‘스펙 쌓기’를 요구하는 사회가 젊은이들을 또다시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목숨을 던지고 있다>와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의 근거로 카이스트에서 올 들어 학생 4명이 자살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2007년 232명, 2008년 332명, 2009년 249명 등 연도별 대학생 자살통계를 제시했다.

기사는 자살의 배경을 <‘선진화’와 ‘경쟁력’이라는 외피를 쓴 체제의 강요>라고 지적했지만 경찰청이 2009년을 기준으로 분류한 대학생 자살 사유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31.3%로 가장 많았고 남녀문제, 가정문제, 취업문제, 경제문제 등으로 다양했다.

전문가들은 “대개의 자살은 한 가지 이유가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발생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위 기사가 지적한 <‘선진화’와 ‘경쟁력’이라는 외피를 쓴 체제의 강요>라든가 <해가 갈수록 높아만 가는 등록금, ‘스펙 쌓기’를 요구하는 사회>가 대학생 자살 배경의 일부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때문에 대학생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식의 총체적 규정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봐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큰 제목의 <죽음 원하는 사회>라는 문구 역시 편집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과장된 표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49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東亞日報 2011년 6월 7일자 A1면 「“좌편향 시각으로 개발 갈등 부추겨”/ ‘국토 교육’도 바로 잡는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보고 개발과 보전에 대한 이해 등 올바른 국토 교육을 위해 국토 관련 교재 개발에 나섰다. 일부 환경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좌(左)편향 언론이 4대강 사업 등 국토 개발에 반대하면서 쏟아낸 일방적인 정보에 일반인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자성이 배경이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초 ‘국토 교육 교재 편찬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류 접수 마감은 13일, 사업자 선정은 20일이다. 국토부는 공고문에서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증폭돼 바람직한 정책 방향, 미래상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균형된 시각,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 및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선정된 사업자는 교재 개발과 관련해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우선 건설기술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이 감정평가사 등 국토 이용 관련 전문가를 교육할 때 사용할 표준교재 개발이다. 또 일부 환경단체 등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좌편향적 정책 비판 정보에 일반인이 균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체험형 국토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과제에 포함돼 있다. 국토 분야를 기술하는 초중고교의 사회교과서를 분석해 편향적으로 서술한 부분을 가려내는 작업도 병행한다.』

“좌편향 시각으로 개발 갈등 부추겨”

## ‘국토 교육’도 바로잡는다

국토부, 교과서 서술 점검키로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보고 개발과 보전에 대한 이해 등 올바른 국토 교육을 위해 국토 관련 교재 개발에 나섰다. 일부 환경단체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좌(左)편향 언론이 4대강 사업 등 국토 개발에 반대하면서 쏟아낸 일방적인 정보에 일반인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자성이 배경이 됐다. ▶A6면에 관련기사

국토해양부는 이달 초 ‘국토 교육 교재 편찬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류 접수 마감은 13일, 사업자 선정은 20일이다. 국토부는 공고문에서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증폭돼 바람직한 정책 방향, 미래상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균형된 시각,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 및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선정된 사업자는 교재 개발과 관련해 세 가지 과제를 수행

해야 한다. 우선 건설기술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이 감정평가사 등 국토 이용 관련 전문가를 교육할 때 사용할 표준교재 개발이다. 또 일부 환경단체 등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좌편향적 정책 비판 정보에 일반인이 균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체험형 국토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과제에 포함돼 있다. 국토 분야를 기술하는 초중고교의 사회 교과서를 분석해 편향적으로 서술한 부분을 가려내는 작업도 병행한다.

황재성 기자 [jsnhng@donga.com](mailto:jsnhng@donga.com)

〈동아일보 2011년 6월 7일자 1면〉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국토해양부가 관련 교재에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올바른 이해, 균형 있는 시각, 건전한 가치관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동아일보 기사는 제목을 통해 이러한 갈등과 논쟁에 대해 “좌편향적 시각으로 개발 갈등 부추겨”라고 이념적으로 재단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 같은 직접 인용문의 내용을 말한 취재원은 없다. 다만 스트레이트 기사임에도 기자 스스로 풀이한 대목에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또 「국토 교육」도 바로 잡는다」는 제목 역시 사실기사의 제목이라기에는 편향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제목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방향은 모두 바른 것이며 이에 대한 이견은 좌편향이거나 바르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이처럼 편향적인 표현은 객관성·공정성·정확성이라는 언론윤리의 원칙을 위배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의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 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50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주문〉**

한겨레 2011년 6월 16일자 3면 「공사중 훼손됐다고…개체 남아있다고…/환경부, 멸종위기종 해제 추진」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겨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환경부가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쟁점이 돼온 주요 멸종위기종을 해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4대강 사업’에서 훼손 논란을 빚은 야생동식물 대부분도 멸종위기종에서 풀리거나 보호등급이 낮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15일 “가창오리(사진 위) 등 멸종위기종 38종을 제외하고 열목어 등 45종을 새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관리제도 개선계획’을 마련해 다음달까지 전문가의 자문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 지정안을 보면, 바다사자와 고리무늬물범, 시베리아흰두루미 등 동물과 매화마름(아래), 한계령풀 등 식물이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됐다. 국내에서 멸

종됐거나 개체 수가 늘어난 동식물을 멸종위기종에서 뺀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4대강 사업으로 충북 충주에 대체 서식지로 옮겨졌다가 말라 죽어 논란을 빚은 층층동굴레도 제외 대상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경기도 가평에만 3만 5000개체가 생육할 정도로 많은 개체가 확인돼 제외 대상에 올랐다”고 말했다. 가창오리, 말뚝가리, 독중개 등 4대강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도 해제 대상에 들었다.

4대강 사업에 따라 개체 수 감소가 예상되는 민물고기 흰수마자과 귀이빨대칭이는 멸종위기종 1급에서 2급으로 등급이 내려갔다. 귀이빨대칭이는 지난 4월 낙동강 합천보에서 수백 개체가 집단 폐사한 바 있다. 다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자연 훼손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단양쭉부쟁이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 현장팀장은 “이제 4대강 사업에 따른 변화를 관찰해야 할 시점인데 서둘러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개체 수와 서식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해제의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열목어, 따오기, 수원청개구리, 노란산잠자리, 염주알다슬기, 각시수련, 화경버섯 등 59종을 신규 멸종위기종 지정 대상으로 정했다. 삶과 하늘다람쥐, 맹꽁이 등 18종은 멸종위기종 제외 후보 대상으로 분류돼, 1~2년 동안의 모니터링을 거쳐 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과거보다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많이 발견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개체 수가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 지정안으로 인해 각종 개발사업에서 습지와 초지를 보전할 근거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겨레는 위 기사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관리제도 개

선계획’을 소개하면서 ‘4대강 사업’ 등과 연관지어 <환경부가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쟁점이 돼온 주요 멸종위기종을 해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기사의 제목도 「공사중 훼손됐다고…개체 남아있다고…/환경부, 멸종위기종 해제 추진」이라고 달았다. 제목대로라면 ‘(4대강) 공사중에 훼손됐다고, (절멸하지 않고) 남아 있다고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라고 할 것이다.

한겨레는 그러나 위 기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기사는 <4대강 사업으로 충북 충주에 대체 서식지로 옮겨졌다가 말라 죽어 논란을 빚은 충충둥굴레도 제외 대상에 들어갔다>고 꼽았지만 “경기도 가평에만 3만 5000개체가 생육할 정도로 많은 개체가 확인돼 제외 대상에 올랐다”는 환경부의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충충둥굴레 문제는 위 기사가 제기한 의혹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었다.

기사는 이어 <가창오리, 말뚝가리, 독중개 등 4대강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도 해제 대상에 들었다>고 지목했지만 의혹과 연결 지을 만한 부연설명은 없었다. 환경부는 “가창오리와 말뚝가리 등 24종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할 당시보다 개체수가 크게 늘어 해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다른 언론은 보도했다.

결국 위 기사에서는 ‘절멸된 것으로 추정되거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동식물의 멸종위기종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환경부의 설명을 뒤집거나 반박할 만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선입견이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사안을 과장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며,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245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준식

〈주문〉

스포츠조선 2011년 11월 9일자 1면 「KPGA 선진화 ... 류진 풍산 회장이 적격/차기수장 입후보 마감 ... 친 류 회장 vs 최상호 전 부회장 2파전 양상」 제목과 3면 「[류진 풍산그룹 회장] KPGA ‘차기수장’ 첫발 내디뎠다/‘친 류진 계’ 한 장상 고문-최상호 전 수석 부회장-이명하씨 등 3명 입후보 ... 23일 투표」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53)이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됐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후임으로 KPGA 수장을 뽑기 위한 입후보가 8일 완료됐다. 최상호 협회 전 수석 부회장(56)과 한장상 협회 고문(71), 이명하씨(54) 등 3명이 입후보했다.

한장상 고문은 당선될 경우 류진 회장을 협회장으로 영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9일 오후 후보 공약이 완전 공개되지만 이명하씨 역시 큰 틀에서는 한 고문과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외부 영입인사인 류 회장과 국내 최다승(43승)의 프로골퍼 출신 최상호 전 부회장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한 고문이 영입 의사를 밝힌 류 회장은 재계 ‘숨은 친골프 인사’다. 남녀 골프 관련 직책을 맡은 적은 없지만 골프계에서는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골프인들의 삼고초려에 최근 마음을 움직였다. 풍산 그룹은 특수합금, 비철금속, 화학관련 글로벌 기업이다. 동산업과 방위산업, 전세계 주화산업까지 아우르고 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상호 협회 전 수석 부회장과 한장상 협회 고문, 이명하 씨 등 3명이 입후보한 상태에서 쓴 선거 해설이다.

기사내용을 보면 이들 중 한장상 후보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협회 회장으로 영입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많은 회원들이 비회원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협회 회장으로 영입하고 싶어 하지만 협회 규약상 비회원은 협회 회장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있고, 이 때문에 한후보가 당선된 뒤 류 씨를 회장으로 영입하는 편법을 쓰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스포츠조선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3명의 후보가 경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스스로 1면 머릿제목을 통해 <KPGA 선진화 ... 류진 풍산 회장이 적격>이라면서 공개적으로 류진 씨의 회장 영입, 즉 한장상 후보 당선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특정 단체의 민주적 선거절차에 관해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매체로서 해서는 안 되는 편파·불공정 보도를 한 것이다.

신문윤리강령은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제4조 「보도와 평론」), '공직선거법'(8조)과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 기준' 등에 따르면 언론사는 후보자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하고 논평해야 하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은폐하는 등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따라서 위 제목과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247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 문〉

東亞日報 2011년 11월 16일자 1면 「정치-사회분야 베스트셀러/20위 중 16개가 '反우파」기사의 내용과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복지란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공동으로 보장해주려는 사회적 염치라는 걸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나는 우리나라 우파는 원시인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100% 해석된다고 봐.”

“천안함 사건에 있어 정말 중요한 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게 아니라 지방선거를 위해 어떻게든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몰아갔던 이 명박의 수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라고.”

단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의 책 '닥치고 정치'의 일부분이다. 교보문고 11월 첫째 주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순위를 살펴보면 1위를 차지한 이 책을 비롯해 상위 20위 중 16개가 반(反)보수우파 성향의 책이다. 보수우파 성향의 책은 15위를 차지한 '자유의 적들'이 유일하다.

○ 상위 80%가 反우파 서적

출판시장이 기본적으로 진보좌파 성향이 강하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처럼 보수우파 성향의 책들이 출판시장에서 몰락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팟캐스트에서 젊은층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나는 꿈수다'(나꿈수)는 오프라인 출판시장도 휩쓸고 있다. 김씨의 책을 비롯해 정치사회 분야

2, 3위는 ‘나꼼수’의 PD인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쓴 ‘나는 꼼수다 뒷담화’와 ‘조국 현상을 말한다’이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은 교보문고의 11월 첫째 주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순위를 열거하면서 20위중 16개의 책이 ‘反우파’라고 분류했다. 이 기사는 ‘反우파’와 ‘보수우파’ ‘진보좌파’ 등 몇 가지 이념적 개념의 단어를 언급하고 이에 따라 베스트셀러 책을 분류했다.

우파나 보수, 진보 등의 개념은 시대와 상황, 개인의 주관에 따라 그 경계가 일정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 신문은 ‘反우파’ ‘보수우파’ ‘진보좌파’ 등의 개념이나 기준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단계를 생략하고 곧장 개인적 판단에 따라 매우 편의적으로 책을 분류했다.

비록 사회 통념적인 ‘편가르기’가 있다 하더라도 기자는 이를 보다 객관화하고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을 통해 기사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자의견을 일방적으로 사실화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001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2012년 1월 4일자 3면 「학생인권조례·SNS가 ‘잔인한 학교폭력’ 더 키운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 학생들을 좀 심하게 꾸중하면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와 오히려 ‘폭력교사’로 몰아 항의하는데 어떤 아이들이 교사를 존중하겠습니까.”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학교폭력의 삼각성은 폭력학생과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학부모, 인성교육에 투자하지 못하고 교과과정에만 매달리게 하는 학교와 교사들 공동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학생들에게 대량 보급되면서 학교폭력의 유형들이 전국적으로 공유되고 있어 폭력의 일반화와 보편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또 서울교육청 등지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학생인권을 앞세워 교권에 마구 도전해도 폭력사태에 대해 말을 못하게 되는 분위기가 더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A고 B(58) 교사는 “아이들이 교사에 대해 하늘처럼 받들지는 못하더라도 반항은 하지 않아야 하는데 체벌금지가 강하게 내려오니까 순응하는 아이들 대신 반항하는 아이들만 늘어난다”며 “훈계와 제재가 필요해도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교사들의 학습지도권 등 교권이 없어져 손도 못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학교폭력의 확산이 사라진 교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과거보다 생활지도나 학생지도에 적극성을 덜 띠게 되며 이런 구조 속에서 교사만의 힘으로는 학교폭력 해결에 역부족이어서 학내에 경찰이 들어와도 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중 D(50) 교사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자들을 구속한다고 하는데 정작 학생들은 이러한 법의 처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법의 처벌이 중요하게 다가가지도 않는다”며 “법의 처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문제를 학교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교사가 심하게 타이트하면 언어폭력이니 뭐니 항의해 제대로 접근조차 못한다”고 말했다.

가정교육 문제를 거론하는 교사도 많았다. E초교 F(48) 교사는 “가정교육이 문제”라며 “학부모들이 와서 따지고 심지어 학부모들이 교사를 폭행까지 하면서 도덕과 인성교육이 중요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뭘 잘못해도 훈육을 제대로 못한다”고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중고등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무감각한 태도를 부추긴다고 말했다. 그는 “축구부에 소속된 학생이 주변의 학생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것을 체벌한(체벌금지 규정 시행 전) 남자 교사가 학교로 찾아온 학부모에게 폭행당해 코피를 흘리는 행태도 목격했다”고 고발했다.

특히 일기장 검사 등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 문제학생들에 대한 체벌 금지 규정 등 학생 인권에 대한 주문사항과 양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가해·피해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한 교사들의 손발을 꼬박 묶어 놓고 있는 것도 학교폭력 확산의 주범으로 꼽고 있다.

교사들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선생님의 힘이 필요한 데도 사회적 여건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권 붕괴를 부추긴다”며 “체벌 금지 규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B 교사는 “교육은 정당을 초월해 순수한 마음으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정당 주장을 염두에 둔 교육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인권조례나 체벌문제와 충돌하게 된다”며 “교육부나 정치권 인사들이 1일교사나 1주일교사처럼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상대하고 학교 현장을 체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교사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바로잡아주고 피해학생을 돌보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 전문가들의 학교내 상주 등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D 교사는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은 인위적인 상담교사 배치가 아닌 외부의 전문 상담기관처럼 학교내에도 심리 상담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문제 학생들을 장기간 치료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1개월이나 한학기 정도 장기적인 인성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학교 폭력의 원인과 대책 전반에 관해 일선교사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리드 문장에서 “일선학교 교사들은… 이런 가운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학생들에게 대량 보급되면서 학교폭력의 유형들이 전국적으로 공유되고 있어 폭력의 일반화와 보편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탄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또 서울교육청 등지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학생인권을 앞세워 교권에 마구 도전해도 폭력사태에 대해 말을 못하게 되는 분위기가 더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사 본문을 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관련된 사실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또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사실도 “…인권조례나 체벌문제와 충돌하게 된다”는 간단한 언급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사실적 근거에 바탕을 두기 보다는 기자 개인의 의도가 매우 앞서고 제목 또한 이에 근거를 두고 다소 과장함으로써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014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준 목

〈주문〉

스포츠서울 2012년 1월 19일자 25면 「‘노스페이스’ 10대에 번 돈 일본에 바친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서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10대 청소년들에게 번 돈을 일본에 고스란히 바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등골 브레이커’ ‘노스페이스 계급’ 으로 불리는 골드윈코리아(회장 성기학)의 ‘노스페이스’는 지난해 매출 6150억원을 기록했다. 단일 해외 패션 브랜드로 연매출 6000억원이 넘어선 것은 노스페이스가 처음이다. 청소년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덕이다. 그러나 노스페이스 수입사인 골드윈코리아는 노스페이스를 국내에 들여온 14년전부터 적지 않은 로열티를 해외에 지불하면서 주주들에게는 엄청난 배당잔치를 벌였다.

◇ 10대 청소년들에게 번 돈을 일본에 유출?

골드윈코리아는 지난 1992년 영원무역 성기학회장이 1978년부터 미국 노스페이스사 제품을 수입 판매해온 일본업체 골드윈과 손잡고 세운 회사로 1997년부터 국내에 노스페이스를 들여와 팔기 시작했다. 이후 영원무역은 자체 브랜드 ‘영원’보다는 노스페이스 수입과 마케팅에 집중하면서 굴지의 국내 아웃도어 업체인 코오롱스포츠와 K2를 따돌리는 기업을 토했다.

골드윈코리아는 2010년에 매출 5300억원, 당기순이익 807억원을 기록했다. 그중 배당금으로만 565억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윈코리아의 대주주인 (주)영원무역홀딩스(회장 성기학·51.0%)가 288억원, 일본 골드윈(40.7%)사가 230억원을 각각 배당받았다. 현재 골드윈코리아의 자본금은 30억원에 불과하지만 2006~2010년 누적배당금은 171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일본 골드윈사는 699억원을 배당받았다. 투자액의 무려 57.2배를 챙긴 셈이다.

◇ 엄청난 배당잔치

비상장사인 골드윈코리아는 주당(액면가 5000원) 매출액이 9만4183원으로 거의 20배에 가깝다. 2011년에도 폭발적이다. 이미 지난해 중간배당으로

역대 최대금액인 114억원을 골드윈에 지급했으며 올 2월로 예정된 기말 배당까지 합해 최소 244억원에서 최대 284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본 골드윈은 국내에서 부는 거친 ‘노스페이스 열풍’ 덕에 앉아서 최소 358억원을 챙길 판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골드윈코리아는 매년 순매출의 5%를 러닝 로열티와 상표권 로열티로 일본 골드윈에 지급한다. 또 미국 노스페이스사에 순매출의 5%를 수수료로, 순매입액의 7%를 디자인사용료를 지불한다. 골드윈코리아가 2006년부터 5년간 일본과 미국에 지불한 로열티와 수수료만해도 1461억원에 달한다.

#### ◇ 고가정책의 희생양은 결국 국내 청소년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한 국내 중소기업 사장은 “노스페이스 등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아웃도어 가격은 거품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옷 재료 값은 옷 가격의 20%를 넘지 않는다. 아무리 톱스타를 쓰고 적극적인 광고·마케팅을 펼친다고 해도 겨울용 옷 패딩 한벌에 70만원씩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그 옷을 꼭 입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불쌍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골드윈코리아측은 “69만원짜리 겨울점퍼는 청소년용이 아닌 고산 등정용이다. 우리가 10대 청소년을 위한 마케팅을 펼친 적이 없고 의도하지도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노스페이스 계급’이니 뭐니 딱지를 붙이는데 그것은 어른들의 시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골드윈코리아측은 “주주 배당과 로열티와 관련해서는 관계자가 해외 출장중이어서 따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지난해 단일 해외 패션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연매출 6,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국내에서 매우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전하고 <이는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서 노스페이스 제품을 파는 회사는 ‘골드윈코리아’로 이 회사는 국내 업체 영원무역이 일본업체 골드윈과 함께 세운 회사다. 이 기사는 골드윈코리아의 대주주는 (주)영원무역홀딩스로 회사 지분 51%를, 일본 골드윈이 40.7%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주)영원무역홀딩스는 배당금 288억원을, 일본 골드윈이 230억원을 각각 배당받았다는 등 투자사 측이 받은 배당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기사는 기사 제목과 리드 문장을 통해 <노스페이스가 10대로부터 번 돈을 일본에 바친다>고 표현했다. 투자사가 투자지분에 따라 배당액을 받는 것은 당연한 상법상 거래의 원칙인데도 일본 투자사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 마치 잘못된 일인 양 표현한 기사 내용과 제목은 사실을 심하게 오도한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015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문>**

중앙일보 2012년 2월 2일자 16면 「대법원에도 반기 드는 서기호<‘가카의 빅엿’ 표현 판사>」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는 대법원이 올해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자신을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한 것에 대해 “나는 떳떳하

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지난해 트위터에서 ‘가카의 빅엿’ 등 지속적인 표현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했다가 소속 법원장에게서 구두 경고를 받은 바 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 인사위원회는 올해 법관 재임용 대상자 가운데 5~6명에 대해 적격심사 개시를 통보하고 당사자 소명을 듣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적격심사란 법관 인사위원회에서 ‘부적합’ 의견을 받은 재임용 대상자의 소명을 듣고 최종 심의하는 과정이다. 법관 인사위원회는 법관 3명과 변호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법관 재임용 심사는 사실상 ‘요식절차’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지 1월 9일자 24면〉

1988년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재임용에 탈락한 법관은 3명에 그쳤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법관들이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대부분 사표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재임용 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이 늘었고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인사위원회 심사도 과거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기호 판사는 이날 법관 인사위원회의 통보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부 언론에 탈락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입니다. 연임(재임용) 적격 여부의 심사 개시를 통보받은 것뿐이고요…다음 주 법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서 판사는 대법원의 적격심사 통보 내용에 재임용 부적합 사유와 적용 법조를 밝히지 않고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측은 “법관 인사위원회 내용은 비공개로 하도록 돼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적지 않고 앞으로 경력 법관이 대거 임용되는 상황에서 법관 자질 평가를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재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관 인사위원회는 다음 주 적격심사 개시를 통보받은 법관들의 소명을 들은 뒤 재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후략)』

# 대법원에도 반기 드는 서기호

(‘가카의 빅엿’ 표현 인사)

대법 “재임용 공개청사 밋을 것”  
서기호 판사 “나는 밋밋하다”  
5-6명에게 심사 기사 퐁보  
다음주 법관 소명 들을 예정



서기호 판사

올해 재임용 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이 늘었고 당사자의 소명을 받은 인사위원회 심사도 공개된다. 공개는 늦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기호 판사는 이날 법관 인사위원회의 통

## 법관 재임용 절차 어떻게 되나

1. 인사청구서를 받은 법관 재임용 신청
2. 법관 인사위원회 재임용 신청 대상심사
3. 법관 인사위원회 적격심사 대상자 퐁보
4. 법관 인사위원회 적격심사 대상자 소명청사 진행
5.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재임용 결정 신청
6. 대법원 최종 결정
7. 대법원 인사발령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07기) 판사는 대법원이 올해 법관 재임용 심사에 서 자신을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나는 밋밋하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지난해 트위터에서 “가카의 빅엿” 등 계속 한 표현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했다가 소속 법원장에서 구두 경고를 받은 바 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 인사위원회는 올해 법관 재임용 대상자 가운데 5-6명에 대해 적격심사 기사를 통보하고 당사자 소명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적격심사란 법관 인사위원회에서 “법적합” 의견을 받은 재임용 대상자의 소명을 듣고 최종 심의하는 과정이다. 법관 인사위원회는 법관 3명과 변호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법관 재임용 심사는 사실상 “모시콜라”라는 비유를 받아왔다.

(문자 1월 9일 24년)  
1988년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재임용에 탈락한 법관은 정형에 그쳤다. 적격심사 대상자 가운데 일부 법관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쓴 것을 켜 대법원 서류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부 언론에 탈락 확정했다는 보도는 오보입니다. 연임(재임용) 적격 여부 심사 기사를 통보받은 것뿐이요... 다음 주 법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서 판사는 대법원의 적격심사 퐁보 내용에 재임용 부적합 사유와 적용 범주를 밝히지 않고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측은 “법관 인사위원회 내용은 비공개로 하도록 돼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적지 않고 앞으로 공개 법관이 대거 임용되는 상황에서 법관 자질 평가를 당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재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지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관 인사위원회는 다음 주 적격심사 기사를 통보받은 법관들의 소명을 들은 뒤 재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석궁 테러 사건’의 주인공 김형호

(59) 전 상공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법관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혐의로 징역 150일이 부과된 서기호 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통상대(曹王三條)를 올린 뒤 담배 따다 쓴 회원이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폐쇄했다. ‘보통상대’란 ‘계상상’에 관한 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억울함을 달래서 말하려고 하지 마라...” 등 불교의 지혜를 담은 글이다.

수감형도 할 교수, 형량주 전 의원 추상 태 법관 & 김형호 전 교수는 정물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주심 이상훈(59) 대법관을 불법 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지난해 3월 재임용 고발장에서 “이 대법원은 80년 관련 위위 사상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감당할 여산 될 안 의원이자 지위 직권을 남용하고 그를 불법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기자 ofhramp@boonngang.co.kr

(중앙일보 2012년 2월 1일자 16면)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기사는 지난 해 트위터에서 ‘가카의 빅엿’ 등 표현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했다가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서기호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올해 법관 재임용 심사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했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서 판사의 반응을 다루었다.

이 기사는 대법원의 조치에 대해 서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일부 언론에 탈락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입니다. 연임(재임용) 적격여부의 심사개시를 통보받은 것 뿐이구요... 다음 주 법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입니다>라고 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위 기사에서 인용한 서판사의 직접적인 반응은 이것이 전부다.

그럼에도 기사는 이 대목에 대해 <서기호 판사는 이날 법관 인사위원회의 통보에 강하게 반발했다>고 표현했으며 제목은 한 발 더 나아가 <대법원에도 반기 드는...>이라고 표현했다.

대법원이 1988년 법관 재임용 심사제도를 시행한 이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법관들은 대부분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사표를 냈지만 서기호 판사는 이 같은 종전의 법원 내부 관행과 달리, 규정에 따라 ‘법관 인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를 두고 <반발>이라거나 <반기 드는...>이라고 한 표현은 기자와 편집자의 편견이 개입한 결과로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2-1016 신문윤리강령 위반

每日新聞 발행인 이창영

##### <주문>

每日新聞 2012년 1월 30일자 1면 「서울언론, 또 신공항 재뿌리기」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유>

1. 每日新聞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서울에 있는 일부 언론이 또 남부권(동남권) 신공항 탄죽결기에 나서고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한 지역여론의 결집과 전파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28일 서울의 한 조간신문은 ‘한나라당이 영남권에서 극심한 지역 갈등을 낳았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걸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영남권 민심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부산과 대구의 갈등을 부를 수 있는 공약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 공약 개발단 관계자의 이야기를 빌었고, 나성린 당 정책위부위원장의 말도 듣는

형식을 취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 수요를 붙잡아 두면서 수도권으로의 빨대 효과를 누리려는 서울지역 언론이 신공항 재추진을 뿌리부터 자르겠다는 의도를 갖고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서울 언론이 인천국제공항의 독점 폐해를 기획·심층보도 하지 않고 지역민의 신공항 수요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지역여론에 등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원진 총선공약개발본부 지역균형발전팀장에 따르면 이달 27일 지역균형발전팀 공약개발 회의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경제권에 대응하기 위한 남부경제권 성장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른 남부권 신공항은 필수라는 의견이 개진됐다.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남부권 신공항이 총선공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팀은 팀장 외 외부 교수 6명, 행정안전위와 국토해양위 당 수석전문위원,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 팀장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서부터 지역 정치권, 지역민 모두가 신공항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만큼 이번 총선 공약에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부산, 경남,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전북, 대전까지의 수요가 있다는 이유로 명칭을 ‘남부권’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때 유치장소 때문에 영남권내 지역간에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남부권(동남권) 신공항’ 건설문제와 관련, 서울의 한 조간신문이 <한나라당이 신공항건설을 4월 총선 공약으로 걸지 않기로 알려졌다>고 보도한데 대해 비판했다.

위 기사는 <인천국제공항 수요를 붙잡아 두면서 수도권으로의 빨대 효과를 누리려는 서울지역 언론이 신공항 재추진을 뿌리부터 자르겠다는 의도를 갖고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거나 <서울 언론이 인천 국제공

항의 독점 피해를 기획·심층 보도하지 않고 지역민의 신공항 수요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지역여론에 등 돌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위 기사는 해당 서울 소재 신문이 특정 의도를 갖고 그 같은 보도를 했다는 지적과 비판을 하고 있지만, 막상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적 근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일방적인 비판을 하면서도 비판 대상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②항(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2-1020 신문윤리강령 위반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 〈주문〉

머니투데이 2012년 2월 11일자 1면 「그날 그법 허태열·우제창이 밀어붙였다/‘포퓰리즘’ 저축은행법 후폭풍/“통과 앞장선 의원 공천 탈락” 여론」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치권이 4·11 총선을 앞두고 시장경제를 뿌리째 흔드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비난이 거세다.

특히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해 법안 통과를 주도한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과 당을 대신해 총대를 메고 나선 우제창 민주통합당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무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과 후순위채권 보유자에게 피해액의 55% 가량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5000만 원 이하 예금만 보호한다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명백히 위반되는데다 3년 전 피해까지 보상하도록 해 소급입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법안은 허 위원장 주도로 추진됐다. 부산 북-강서율이 지역구인 허 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가 몰려있는데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지자 다급한 나머지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우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등 법 통과에 앞장섰다. 지역구(경기도 용인시 을)나 경제통(서울대 경제학과, 런던 정경대 경제학 석사)이라는 평판을 고려하면 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 국회 안팎에서는 부산에서 바람을 일으키려는 민주통합당을 위해 총대를 멘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이 통과되자 후폭풍이 거세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이 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위 기사에서 이른바 ‘표플리즘’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지난 2월 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주역은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허태열 의원과 민주통합당 우제창 의원이라고 지목하고 이들을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 내용에 맞춰 기사 큰 제목은 「그날 그법 허태열·우제창이 밀어붙였다」, 작은 제목은 「“통과 앞장선 의원 공천 탈락” 여론」이라고 각각 달았다.

기사는 허 의원이 지역구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우 의원은 부산에서 바람을 일으키려는 당을 대신해 총대를 땀다는 정황 등을 그 이유로 꼽았으나 정

무위 투표에 참석한 여야 의원 13명 가운데 왜 이들만 비난의 표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일부 다른 언론은 허 의원과 우 의원 말고도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의원으로 부산 출신 의원 몇 명을 추가로 거명했다.

기사는 특히 리드 부분에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지만 ‘목소리’를 높이는 주체가 누구인지 등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다. 또 비난의 당사자인 허 의원과 우 의원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는 문제의 법안 처리에 대한 비난 여론에 맞춰 취재기자가 사건이나 선입관을 지나치게 앞세워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이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2-1032 신문윤리강령 위반

#### 헤럴드경제 발행인 유 병 창

##### <주문>

헤럴드경제 2012년 2월 27일자 10면 「성폭행당한 딸 위해…시한부 인생 엄마의 잔인한 선택/“공권력 못믿겠다” 청부폭력 시킨 부모」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매일매일 조금씩 살이 썩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엄마 K(52) 씨. K 씨

는 남편 L(55) 씨와 몇 년 전 이혼한 뒤 딸 L(15) 양과 함께 어렵게 살아왔다.

중소기업에 다니던 L 양의 아빠 L 씨는 K 씨에게 넉넉한 생활비를 주지 못했다. 이러던 중 딸 L 양은 두 달 전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S(19) 군과 사귀게 됐다. S 군과 가깝게 지내던 L 양. L 양은 지난 21일 낮 12시께 병마에 시달리던 엄마 K 씨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다.

바로 딸아이의 남자 친구인 S 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였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던 K 씨는 이혼 후 연락이 뜸했던 남편 L 씨에게 연락을 했다.

그리고 L 씨와 K 씨는 부인의 남동생 K(49) 씨에게 딸아이의 성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남동생 K 씨와 남동생의 사회 후배 A 씨는 바로 S 군을 경기도 김포의 한 바닷가로 끌고 가 손과 발을 묶은 뒤 경기도 강화 등지까지 끌고다니며 약 7시간 동안 마구 폭행해 2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L 양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S 군은 “L 양과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7일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청부폭력을 지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남편 L 씨와 부인 K 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부부의 지시를 받고 폭력을 행사한 남동생 K 씨, A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가 공권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직접 응징·징벌하겠다는 나선 사건이다. 최근 개봉해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하울링’에는 늑대개가 등장하는데, 이 늑대개는 딸아이를 강제 매춘(賣春)시킨 인간에 대한 분노를 늑대개를 통해 표출시킨 한 아버지의 스토리에서 비롯된다. 지난 1985년 개봉 화제작 ‘에미’ 역시 사창굴에 팔려 나간 딸아이를 찾아 나선 어머니가 결국 딸아이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일당을 살해한다는 얘기다.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가상 스토리 픽션(Fiction)이, ‘팩트’화 돼 실제에서 벌어져 더욱 관심을 끈다.

무엇보다 이같이 공권력을 믿지 못해 직접 응징·징벌하겠다고 나선 경우는 성폭행 사건에서 더욱 빈번하다. 성폭행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피해 조사를 받을 때 2차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부모는 물론 딸아이의 최소한 자존심까지도 조사과정에서 짓밟히게 된다. 여기에 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부모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양형을 받기 어렵다.

성폭행을 당한 딸아이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는 뻔뻔한 경우도 많다. 돈으로 막자, 몇 년 살고 말지 등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발생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성폭행 피해자 자신이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가해자는 당신들이 한번 해 보라 등의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상황이 역전돼 피해 여학생 부모 입장에서 보면 속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10대 소녀가 어머니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하자, 그 어머니가 이혼한 남편(소녀의 아버지)과 상의해 자신의 남동생으로 하여금 성폭행을 했다는 청소년을 폭행토록 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해설한 게 그 요지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보면 이들 부모가 ‘공권력을 못믿어서’ 것처럼 청부폭행을 했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위 기사는 ‘국가 공권력을 믿지 못하겠다며 직접 응징·징벌하겠다고 나선 사건’이라고 단정했으며 기사 제목도 이 대목을 근거로 해서 뽑았다. 이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②항(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제10조 「편집지침」 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 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 ▲ 2011-1105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 <주문>

東亞日報 2011년 4월 7일자 A8면 「3·4 디도스 공격도 북한 소행」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난달 4일 청와대 등 국가기관과 금융회사, 포털 사이트 등 국내 40개 주요 사이트에 감행된 '3·4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4 디도스 공격이 2009년 발생했던 '7·7 디도스 대란'과 동일한 기관 또는 집단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6일 밝혔다. 2009년 7·7 디도스 대란 당시 공격 명령 근원지는 북한 조선체신성이 할당받은 중국의 한 인터넷주소(IP)였으며 경찰은 당시와 이번 공격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7·7 디도스 대란 당시 확보한 악성코드 1건과 동일하게 설계된 악성코드가 지난달 3·4 디도스 공격에서도 유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실세계에서 범인이 지문이나 족적을 남기듯 프로그램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설계된 구조가 조금씩 다르다"며 "동일한 구조의 프로그램이 나온 이상 두 사건은 같은 집단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디도스 공격 명령에 동원된 전 세계 70개국 746대의 해외 서버 중 3대의 IP는 2009년에도 사용된 주소로 나타났다. 경찰은 "동일범이 아니라면 전 세계 42억 개의 IP 중 비슷한 범행에 IP 3개가 겹치는 우연이 발생하기 힘들다"며 "여러 단계의 해외 서버를 거치는 공격 수법도 2009년 당

시와 같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3·4 디도스 공격 감행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동안 공격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10만여 대의 좀비PC를 만든 후 해외 746개 서버를 통해 지난달 3~5일 3일 동안 공격을 감행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2011년 3월 4일 포털 사이트 등 국내 40개 주요 사이트에서 발생한 디도스 공격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제목도 ‘3·4 디도스 공격도 북한 소행’이라고 달았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공격자가 북한’ 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또 다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공격의 근원지를 추적해 본 결과 북한 체신청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2009년 7·7 디도스 대란과 동일한 기관 또는 집단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경찰이 7·7 디도스 대란 당시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판단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즉 경찰은 ‘7·7 디도스 대란 당시 확보한 악성코드 1건과 동일하게 설계된 악성코드가 3·4 디도스 공격에서도 유포됐으며 동일한 구조의 프로그램이 나온 이상 두 사건은 같은 집단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함으로써 이번 공격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추론한 것이다.

이같은 추론은 ‘북한이 저지른 소행’이라는 확정 판단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한 기사 본문과 제목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및 ②항(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제10조 「편집지침」 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53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유병창

〈주문〉

헤럴드경제 2011년 5월 20일자 1면 「김정은 오늘 전격 訪中/새벽 열차로 투먼 도착...김일성 유적지 순례·시진핑 부주석과 회동 가능성」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한 김정일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20일 새벽 두만강변 투먼을 통해 중국 땅을 전격적으로 밟았다. 북한의 후계자 자리에 오른 뒤 첫 단독 중국 방문이다.

이날 투먼 소식통은 “김정은이 오늘 새벽에 투먼에 도착했다”며 “이 열차는 무단장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지난해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했을 당시 귀로였던 창춘-하얼빈-무단장을 역순으로 찾아 조부인 김일성 주석의 혁명유적지 순례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먼 일대에는 경비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이날 새벽부터 북한 고위인사의 방중설이 나돌았다.

또 투먼과 북한의 남양을 잇는 다리 주변 등 시내 전역에는 공안들이 배치돼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중략)

북·중 혈맹 과시 차원에서 후진타오가 직접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저우융캉 상무위원,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 그리고 최근에도 멩젠주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을 통해 김정은의 방중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멩 부장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

로 추대돼 조선혁명의 계승 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데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면서 북한의 권력 승계를 공식화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지난 5월 20일 새벽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는 1면 스트레이트 기사로 당일 오후 방문자가 김정일로 확인되면서 오보로 판명이 났다.

연합뉴스 중국 특파원이 오전 9시 11분에 긴급타전하면서 뉴스를 타기 시작한 ‘김정은 방중’ 기사는 정부 ‘핵심 관계자’가 “오늘 새벽 김정은이 방중한 것으로 안다”고 발언함으로써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했고 이에 따라 헤럴드경제를 비롯한 석간신문, 방송과 통신, 인터넷매체 등 대다수 언론이 오보를 내는 결과를 빚었다.

이 과정에서 헤럴드경제는 연합뉴스 제공 기사 중에서 ‘투먼 소식통’의 발언을 <“김정은이 오늘 새벽에 투먼에 도착했다” “이 열차는 무단장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부 표현만 바꿔 전재했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

위 기사 내용만 놓고 본다면 ‘김정은 방중’에 대한 취재원은 ‘투먼 소식통’, 즉 연합뉴스 뿐인데도 헤럴드경제가 이를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보도한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②항(미확인보도 명시 원칙)과 제10조 「편집지침」 ③항(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에 저촉되며, 통신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항(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3. 선정보도의 금지

#### ▲ 2011-1154 신문윤리강령 위반

####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 <주문>

朝鮮日報 2011년 5월 26일자 A11면 「사건 인사이드/아내 살해 완전 범죄 노린 교수/CCTV160여 곳 한 군데도 안 찍혔지만.../바다로 갈 줄 알았던 시신 떠내려와 덜미」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내연녀와 공모해 살해한 혐의로 24일 구속된 부산 모 대학 교수 강모(53)씨는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물거품으로 끝났다. 컴퓨터 범죄 전문가인 강씨는 대형로펌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가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곳곳에 남긴 증거 때문에 고개를 떨어뜨려야 했다.

강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릴 곳을 미리 물색하다가 강이 바다로 연결되는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로 정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은 내연녀가 승용차로 옮기기로 계획을 짰다. 범행에 쓸 노끈과 포대, 대형 가방을 각각 다른 곳에서 구입하고 쇠사슬은 경남 양산에서 구입했다. 범행 열흘 전부터 내연녀와는 휴대폰 전화도 하지 않고 공중전화만 이용했다.

컴퓨터 전문가인 그가 가장 신경쓴 것은 CCTV였다. 그는 자기가 아파트에 들어올 때 CCTV에 어떻게 찍히는지를 알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화면을 USB에 담아오기도 했다. 그는 아내를 만나는 장소와 시신을 운반하는 길을 CCTV가 찍히지 않는 곳을 골랐다. 경찰이 160여개의 CCTV를 조

사했지만 그의 모습은 찾아낼 수 없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범행 날짜를 그가 산행모임 회식이 있던 날로 잡았고 범행 후에도 술집에서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혼자 술을 마셨다. 그는 술집에 들어간 시각이 새벽 1시 30분이었는데도 일부러 술집주인에게 3차례나 “12시 30분 맞지”라고 말하며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했다.

범행 후엔 휴대폰부터 바꿨다. 서울의 카카오톡 본사까지 찾아가 내연녀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웠다. 자기 아내를 목졸라 죽인 차는 세차를 하고, 아내의 시신을 운반한 내연녀 차는 중고차 시장에 팔았다.

하지만 곳곳에 흔적을 남겼다. 경찰은 그의 차를 정밀 감식해 핏자국 흔적을 찾아냈다. 시신을 담은 가방을 구입하던 장면은 매장 CCTV에 찍혀 있었고, 카카오톡 본사에서 지운 문자메시지는 경찰이 복원해 공범인 내연녀를 찾아냈다. 강씨의 결정적인 실수는 시신유기장소를 을숙도로 택한 것이었다. 이곳은 평소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곳이어서 밀물 때 시신을 담은 등산가방이 갯가로 밀려온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컴퓨터 범죄에 대해선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수사 전문가의 영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한계가 있어 ‘완전 범죄’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라고 말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내연녀와 짜고 아내를 살해한 대학교수의 범죄행각을 다루었다. 그러나 범인인 대학교수가 완전범죄를 노리고 실행했던 범행 전 과정의 수법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소개했다.

위 기사는 잔인한 범행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매우 선정적인 동시에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이 같은 기사는 어린이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항(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항(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268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준 목

〈주문〉

스포츠서울 2011년 10월 24일자 23면 김세영 성인극화 「갬블파티」(그림 강영환) 412화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만화는 한 도박전문가가 경쟁상대를 납치한 뒤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브라질의 강에 서식하는 흡혈물고기 칸디루를 몸속에 넣겠다고 협박을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그는 이 초소형 살인 물고기 수십 마리가 몸속에 들어가 남자의 고통에 파고 들어가서 흡반과 갈고리로 방광을 점령하면서 몸속을 이리저리 파헤치는 잔인한 상황을 <“이놈들이 요도 속으로 파고 들어가 암모니아 가득한 너의 방광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문제야!!”> <“일단 파고 들기 시작하면 등뼈와 지느러미가 우산처럼 활짝 퍼지기 때문에 죽어도 빼낼 수 없어!”> 등 매우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는 매우 비인간적이고도 비윤리적인 상황 묘사일 뿐만 아니라 모방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항(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270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유 종 관

〈주문〉

헤럴드경제 2011년 11월 24일자 10면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친모살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학교 때부터 줄곧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온 A(18)군은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통했다. 학교 친구와도 관계가 원만해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는 등 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A군은 23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51)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8개월 동안 방치한 혐의로 체포됐다. 모범생으로 통하던 A군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학교 때부터 전국 석차가 4000~5000등에 들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던 A군은 5년 전 부모가 별거하면서 어머니의 지나친 관심으로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았다.(중략)

그러던 중 지난 3월 14일 학교에서 대학 진학상담을 위해 부모를 모셔오게 되면서 성적을 위조한 것이 들통날 것이 두려웠던 A군은 13일 일요일 오전 11시께 범행을 결심했다.

안방에서 낮잠을 자던 B씨의 왼쪽 눈을 찔렀으나 저항하자 목을 조르려 했고, 이도 여의치 않자 다시 흉기를 집어들고 어머니를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케 했다.

A군은 어머니가 숨지자 그대로 안방에 사체를 방치했다. 여름에 구더기가 일고 냄새가 나자 공업용 본드로 안방 문틈새를 완전히 봉인했다. A군은 사체가 부패돼 가는 중에도 집으로 친구를 데려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범행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남자 고등학생이 친어머니를 살해하는 과정이나 살해 후 방치하는 행태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하게 서술해 결

과적으로 선정적인 표현을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안방에서 낮잠을 자던 B씨의 왼쪽 눈을 찔렀으나 저항하자 목을 조르려 했고, 이도 여의치 않자 다시 흉기를 집어 들고 어머니를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케 했다〉는 대목과 〈A군은 어머니가 숨지자 그대로 안방에 사체를 방치했다. 여름에 구더기가 일고 냄새가 나자 공업용 본드로…〉 등의 표현은 사실관계의 서술범위를 벗어나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면을 지나치게 세세히 묘사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항(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272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경향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스포츠경향 2011년 12월 6일자 3면 「폭로이유 밝힌 블로그 내용/“가식·거짓말 더는 못봐주겠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1. 스포츠경향을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편집자주〉 A양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전 문은 H씨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요약: XXX는 전 XXXXX이며 한국의 XXXX입니다. 이 문서는 한국의 대중에게 그녀의 두 가지 모습, 그녀의 조작, 그리고 그녀의 지속적인 거짓말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순수한 형태의 나르시스트입니다.

그녀의 성형수술, 속임수 및 방송 이미지는 그녀가 일반 대중을 속이기 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기적이고 단 하나의 이유, 그녀 자신의 이미지 만 신경씁니다.(중략)

증언: A) XXX의 남자 친구는 XXX의 형제, 어머니, 동생의 친구, 가족과 변호사에 의해 심각하게 폭행당하고 위협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XXX의 아파트에서 (XX동에 XX아파트에서) 인질로 잡혔고 혈서로 서명하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 증거는 나중에 경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B) XXX는 최소한 두 명의 태아를 낙태시켰습니다. 그녀는 가장 최근에 홍콩에서 낙태수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연결된 의료 기록을 참조하십시오.

C) XXX는 TV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그녀의 분명히 가슴, 눈, 얼굴 등에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그녀의 몸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설명이 첨부된 이미지를 참조하십시오.

D) XXX는 순결과 카리스마의 이미지를 항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섹스 비디오에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거짓말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중략)

보호: 모든 기록을 백업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XXX의 가족이 거짓말하고, 폭행하고 심지어는 진실을 막기위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믿습니다. 대사와 경찰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작성자 또는 XXX의 옛 남자 친구에 관한 한 모든 손해는 기소하고 공개합니다. 글쓴이와 XXX의 남자 친구는 모두 법적 결과(제시한 모든 글은 쉽게 입증 가능)에 대해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고 언론에 자유롭게 말할 것입니다.』



함께 A양의 은밀한 사생활을 구석구석 폭로하고 있다. 이 같은 비방과 폭로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A양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치명적으로 훼손한다.

이처럼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훼손하는 일방적 주장을 스포츠경향이 <편집자 주>를 통해 <전문은 H씨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라고 밝히면서까지 전문을 게재한 것은 '사실'에 기초한 보도가 아니다. 이는 독자의 부적절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선정적 제작행태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항(선정보도의 금지),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항(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항(공인의 사생활 보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2-1017 신문윤리강령 위반

####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응

#### <주문>

한국경제 2012년 1월 28일자 A20면 「수면제 사모으며 왕따 견디다 '1388' 전화했더니/1분 1초가 지옥인데... “상담예약후 2주 기다려라”」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경기도 A고 2학년생인 김모군(18)은 요즘 수면제를 사 모으고 있다. 지난해 9월, 해남에서 전학온 뒤 친구들로부터 '촌놈'이라고 놀림당하다 구타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도움의 손길을 뻗을 곳도, 뾰족한 해결책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부모님은 맞벌이라 얼굴 볼 시간이 거의 없다. 선생님에게 털어 놓기도 쉽지 않다. 청소년 전화 상담을 활용해 고민을 털어놨지만 “선생님

이나 부모님께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라”는 판에 박힌 답변만 돌아왔다. “만나서 얼굴을 보고 고민을 말하고 싶다”는 요청엔 “우선 전화예약하고 2주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건조한’ 대답뿐이었다.

피해 학생이 자살하거나 가해학생이 구속되고, 피해학생의 부모가 학교와 교육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왕따문제가 사회현안이 됐다.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나 학생 대다수가 학교생활에서 가장 바라는 게 ‘왕따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정도다.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피해학생들의 극단적 행동을 막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청소년상담센터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상담센터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다.

상담원 한 명이 하루 수십통의 전화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고민 있는 청소년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받아내기가 요원한 실정이다.

◆ 전화상담 ‘판에 박힌 위로’

청소년 상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려고 취재팀은 ‘전학 이후 왕따(집단따돌림)로 괴로워하는 고교생’이란 상황을 설정한 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상담전문 전화인 ‘헬프콜청소년전화 1388번’에 전화를 걸었다. 전직 교사 출신이라고 소개한 여성 상담원은 전화상담에 친절하게 응했다.

“학생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가족과 담임선생님에게 알려주세요” “자살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으면 힘이 될 겁니다.”

그는 줄곧 경청하면서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혼자 끌어안지 말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라” 외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들려주질 못했다. 실제로 막바지에 몰린 ‘위기의 청소년’이 전화했다면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했을지 의문이었다.

“상담센터에서 학교에 연락해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주면 안 되나요”라고 요청했지만 “그런 절차가 없어서…그건 좀 곤란하고요…(중략)…그러지 말고 번호 하나 적어봐요. 1588-7179, 학교폭력긴급전화인데요 이 번호로 전화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시가 내려갈 겁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운영하는 ‘학교폭력SOS지원단 (1588- 9128)’에도 전화를 걸어봤다.

“6개월 전 부산에서 전학왔는데요. 축구시합을 하다 학교 일진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때부터 매일 언어맞고 있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자 상담원은 “선생님에게 얘기했나요? ‘괴롭힘 당했다’고만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언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라고 응답했다.(하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이른바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이 상담전문기관에 상담하려 해도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없이 지극히 원론적이고도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온다는 게 그 요지다. 그러면서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사 모으면서 상담을 시도하는 학생의 사례를 설명했다.

하지만 첫 리드 문장과 제목의 <수면제 사 모으며...>라는 대목은 학교폭력으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자살 충동이나 모방 행위 등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는 신문 기사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항(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항(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2-105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유 병 창

#### <주문>

문화일보 2012년 3월 19일자 22면 「엽기남편, 이혼요구 20살 연하 아내 乳頭 잘라 ‘꿀꺽」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3월 19일자 24면 「이혼 요구하는 아

내 유두 잘라 삼킨 엽기男」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문화일보와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문화일보)=『경북 안동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유두를 잘라 소주와 함께 마신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안동경찰서는 19일 흥기로 아내의 유두를 잘라 삼킨 혐의(중상해)로 중국인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안동시 옥동 자신의 집에서 탈북 여성인 아내 B(28)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문구용 흥기로 B씨의 왼쪽 유두를 잘라 소주와 함께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한테 창피를 줘서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핏김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이웃주민의 도움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헤럴드경제)=『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A(28) 씨. A 씨는 탈북 새터민이었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직이었던 조선족 출신의 남편 B(48) 씨는 평소 자주 술을 마셨다. 술 취한 상태에서는 각종 폭력도 일삼았다. 지난 15일 오후 3시께 B 씨와 A 씨는 부부싸움을 했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대 B 씨는 책상 서랍에 있던 문구용 칼을 꺼내 A 씨의 왼쪽 유두를 잘라 그대로 삼켰다. A 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 술 취한 남편이 부인의 유두를 문구용 칼로 잘라 소주와 함께 삼켜먹었다는 내용의 엽기적 사건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했다. 이처럼 잔인한 사건에 대해 그 범행과정과 수법을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전하는 것은 매

우 선정적인 편집행태이며 나아가 청소년 세대에게 모방범죄 등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3조 「보도준칙」 ③항(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보호」 ④항(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05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스포츠경향 발행인 송 영 승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문〉

스포츠경향 2012년 2월 25일 13면 연재만화 「성형술사」 (글 조성황, 그림 김일민, 감수 김수신) 240회, 스포츠조선 3월 16일자 14면 연재만화 「좀비콤비」 (글·그림 김행장) 2238회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스포츠경향은 등장인물이 독백 중 '니기미'라고 내뱉는 욕설을 그대로 게재했다.

스포츠조선 만화에서는 자칭 '나는 버스기사다'라는 조폭의 우두머리가 운전하는 버스 안에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는 승객을 보다 못해 함께 타고 가던 부하들에게 '묻어'라는 뜻의 손가락 지시를 하자, 이어지는 컷에서는 "저 종자 만든 애비 에미까지... 모두"라는 막말 지문과 함께, 협상국은 사내 3명(조폭 부하)이 사람 4명을 발가벗겨 입을 테이프로 봉한채 흉구덩이에 묻어 살해하는 장면을 묘사해 극적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세태를 풍자한 이런 만화의 내용들은 신문의 고운 언어 사용하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명경시 풍조를 조장해 신문의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항(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4. 답변의 기회

### ▲ 2011-110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全北日報 발행인 서 창 훈
2.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병 찬

#### <주문>

全北日報 2011년 3월 29일자 1면 「대형마트, 도로 ‘무단점용’ 논란」· 4월 7일자 1면 「대형마트, 교통평가 ‘시늬’/행정기관, 사후조치 ‘외면」· 4월 8일자 1면 「이마트, 공공용지를 사유지처럼 사용」, 전북도민일보 4월 13일자 1면 「전주 평화동 ‘영무 예다음’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3.3㎡당 620만원 말도 안 돼”」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全北日報 전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全北日報) <3월 29일자>=『이마트 전주점이 지난 10년 넘게 수시로 도로를 불법 점유한 채 적재차량에서 물품을 하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상습 불법 도로 점유에 대해 단속기관인 전주 완산구청은 “단속을 하기 위해 현장을 찾으면 문제를 찾을 수 없었다”만 밝혀 ‘봐주기’ 논란마저 일고 있다.

전주시 서신동 이마트 하역장이 위치한 이면도로에서는 거의 매일 화물차와 물건을 옮기는 손수레가 준비하고 직원들이 이를 하역하는 작업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차도가 사실상 물류 작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출근길에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주·정차된 화물차량이 시야를 가리고 차도와 하역장을 수시로 드나드는 지게차와 손수레가 통행을 방해한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이마트의 불법 행위가 일상화되는데도 완산구는 교통흐름을 방해

하는 요인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후략)』

〈4월 7일자〉=『속보= 이마트 전주점이 10년 넘게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점유하며 수시로 물품 하역 작업을 벌이고 있는 원인이 '무능한 행정'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3월29일 1면)

전북도는 지난 2003년 10월 15일 이마트 전주점이 판매시설 증축 및 주차동 신설을 추진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했다. 당시 도는 '이마트 증설로 인해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이마트 뒤편 도로(KT건물 사이)의 심각한 교통 흐름 방해가 우려되니 편도 1차선의 도로를 확포장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이마트는 기존 전주시 왕복 2차선 도로(10M) 옆에 추가로 1차선 도로(6.1M·이마트 소유 땅)를 개설, 교통평가 심의에서 주문한 내용을 이행했다.(후략)』

〈4월 8일자〉=『속보= 전주 서신동 이마트 전주점이 전북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에 따라 개설한 뒤 13년째 물류하역장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본보 취재 결과 이마트 측이 공공용도로 사용키로 각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본보 3월 29일 1면, 4월 7일 1면)

그러나 전주시는 13년간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개설된 도로는 이마트 사유지로 단속 근거가 없다'며 행정 권한을 포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마트 전주점은 전북도의 '원활한 주변 소통을 위한 편도 1차선(KT 건물과의 사이) 도로를 확포장하라'는 주문을 이행, 지난 1998년 문을 열었다.

이마트는 개점한 이래 현재까지 수시로 자신들이 확포장한 1개 차선 도로를 점용하고, 물품을 하역하는 등 교통 흐름을 방해했지만 완산구청은 '해당 도로는 개인(이마트) 부지로 단속 권한이 없다'며 이를 방관해 왔다.(후략)』

(전북도민일보)=『“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소식에 이제껏 마련한 목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까하고 모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설 입지 여건이라든지 최근의 분양가 인하 추세라든지 이것저것 따져 봤더니 저렴하기는 커녕 오히려 비싸다는 느낌입니다.”

지난 8일 전주시 평화동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영무 예다음 모델하우스를 12일 방문한 시민 박모(46·여)씨는 “주변에 건축사가 있어 분양가의 적정여부를 물어봤더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고분양가라며 입주를 만류하더라”고 말했다.

전주시 평화동 전주교도소 인접지에 전용면적 85㎡(33평형) 407세대를 분양 중인 ‘영무 예다음’아파트가 분양가격이 전주시권에서 분양중인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다는 홍보와는 달리 고(高)분양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2개 신문의 적시 기사들은 각각 전주 서신동 이마트 전주점이 이면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한 채 13년째 물류하역장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 전주시 평화동에서 분양중인 ‘영무 예다음’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다는 홍보와는 달리 고(高)분양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위 奎北日報 기사는 문제가 된 이면도로에 대한 행정관청의 해명은 게재했지만 비난 직접 당사자인 이마트 전주점의 해명을 반영하지 않았고 전북도민일보 역시 ‘영무 예다음’ 아파트를 비판하면서 해당기업의 해명이나 반론을 지면에 함께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행태는 신문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10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조 용 기**

〈주문〉

국민일보 2011년 4월 14일자 21면 「교과부 본부장 내정 8일 만에 물러난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서울시교육청 학생부 감사는 엉터리”」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에 내정됐다가 논란 끝에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한가람고 이옥식(53·여) 교장은 1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사퇴하겠다고 말하고 나서 최근 들어 처음으로 발을 뺀고 잤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본부장에 내정됐으나 8일 만인 12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교내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꼭 가고 싶던 자리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며 “내가 본부장에 내정되지 않았다면 시교육청 감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라고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이 교장이 교과부 1급 본부장에 내정된 사실이 지난 7일 보도되면서 최근 시교육청이 실시한 학생부 감사 결과 한가람고가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장 많이 고친 학교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학교 실명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한가람고는 ‘학생부를 조작해 학생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학교’로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이 교장은 그러나 현장과 맞지 않게 지침을 해석한 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는 ‘학생부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정정하는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로 명시돼 있다. ‘사용자’는 ‘학교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이 교장은 “현재 3학년 학생의 2학년 때 특기사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2학년 때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라며 “학교장으로서 고3 담임이 아닌 해당연도의 교사에게 누락된 사항을 채워 넣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업무 처리”라고 말했다.

또 “특정연도의 특기사항에 대해 그 다음해에 입력할 수 없도록 훈령이 개

정된 것은 올해 2월”이라며 “개정 훈령에 따르면 2년 전의 특기사항을 지난해 입력한 것은 적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학생부 감사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표적감사이며 결과가 완전히 조작됐다는 것이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며 “교과부 본부장 자리에 아쉬움은 없지만 시교육청의 잘못된 감사에 대해서는 꼭 사과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대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하고 연세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을 공부한 이 교장은 1980년부터 수학교사로 현장에 뛰어들었다. 1991년부터 영등포여상 교장을 맡았고 한가람고에는 1997년 설립 당시 교장으로 부임했다.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학생에게 맞추는 교육’을 강조하는 이 교장은 한가람고에서 교과교실제, 계절학기제, 학점제 등의 개혁을 시도했다. 교사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교장실도 없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이 교장에게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권한 사람들이 많았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한가람고 이옥식 교장과 행한 위 인터뷰 기사에서 「“학생부 감사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표적감사이며 결과가 완전히 조작됐다는 것이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며 “교과부 본부장 자리에 아쉬움은 없지만 시교육청의 잘못된 감사에 대해서는 꼭 사과를 받을 것”이라는 이 교장의 주장을 ‘서울시 교육청 학생부 감사는 엉터리’라고 축약해 이를 제목으로 뽑았다. 하지만 국민일보는 이처럼 비판 대상인 서울시 교육청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를 지면에 함께 반영하지도 않았다.

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지면에 함께 반영해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해야 함에도 국민일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및 ④항 (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27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東亞日報 2011년 5월 13일자 A4면 「문제-소련 몰락했는데 北은 왜 안 망했을까/답안-“김일성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됐기 때문”」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1980년대 소련을 비롯하여 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줄줄이 몰락했을 때 북한은 왜 망하지 않았을까?(15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었던 김형근 씨(51)가 2007년 전북 A고 교사로 근무할 때 1학년 학생들에게 냈던 도덕 시험 주관식 문제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와 비전향 장기수를 모아 이적단체 ‘통일대중당’ 결성을 추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전북 B중 학생과 학부모 180여 명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간 혐의(국보법 위반)로 2008년 구속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 씨는 C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전북연합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 혐의(국보법 위반)로 1996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1999년 교사가 된 뒤 2008년 전북 전주 완산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내기도 했다.

○ 통일교육 명목으로 북한 옹호

김 씨가 9년간 도덕 과목 시간에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는 시험문제와 학생들의 답안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위 문제에 대해 한 학생은 ‘북한에 한민족의 기상이 남아 있어서다. 우리가

외환위기(IMF) 때 모두 한마음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했듯 북한도 어렵지만 서로 도와가며 민족의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고 적었다.

다른 학생들의 답안도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돼 있었다. 김 주석의 정치가 대단하다 △북한 사회의 단결성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와 지도자를 매우 신뢰한다'며 북한 체제를 옹호했다.(중략)

전교조에는 그를 적극 지지하는 교사가 적지 않다. 김 씨가 지난해 7월부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전교조 퇴직교사모임 '향'의 인터넷 카페에 실린 아래 글이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다.

“(A고 도덕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훑어보니 선생님의 충심어린 내용들이 깊은 감동으로 묻어납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이나 반공적 부분도 조금이라도 다루었다면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분들이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수많은 제자들을 조용히, 소문 없이 양산해 내지 않았을까 합니다. 의로운 일이 장기간 지속돼야 한다는 고민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전교조는 연방제 통일,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담은 수업지도안을 만들어 교사들에게 지도하도록 권장하고 청소년캠프나 통일 문예한마당 행사를 통해 반미 중북주의 사상을 전파한다”며 “이런 사상은 아직 사고의 틀이 자리 잡히지 않은 학생들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전교조 소속이었던 교사 김형근 씨가 도덕과목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의 내용과 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력에 대해 지면의 절반을 할애해 다루었다.

이 신문은 김 씨가 가르친 내용을 ‘중북교육’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기사말미에 ‘교육관계자’라는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 <“전교조는 연방제 통일,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담은 수업지도안을 만들어 교사들에게 지도하도록 권장하고 청소년 캠프나 통일 문예한마당 행사를 통해 반미 중북주의 사상

을 전파한다”며 “이런 사상은 아직 사고의 틀이 자리 잡히지 않은 학생들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한 말을 보도했다.

이 기사는 그 내용에 상관없이 신문윤리강령이 요구하는 ‘형식적 준칙’과 거리가 있다. 즉, 지면의 절반을 할애해 주로 김 씨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김 씨에게는 해명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 또 이 기사 말미에 등장해 전 교조의 교육방향에 대해 비판한 ‘교육관계자’는 실명이 아닌 익명이다. 이러한 보도행태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항(답변의 기회),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②항(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1-1157 신문윤리강령 위반

####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응

##### 〈주문〉

한국경제 2011년 6월 7일자 A6면 「부산저축은 김기현 고문 골프장·단란주점서 로비?」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기현 부산저축은행 고문이 부산저축은행의 ‘로비 창구’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고문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2007년 설립한 투자자문회사 ‘FR NIB’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6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김 고문의 부산저축은행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그는 2007년 10월 이후 부산저축은행 카드를 사용했다. 주로 골프장과 단란주점에서 돈을 썼다. 점심식사 위주였던 다른 고문의 사용 내역과 확연히 달랐다.

사용액은 대체로 크지 않았지만 간혹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결제했다가 뒤늦게 취소하는 등 통상적인 카드사용으로 보이지 않는 기록도 있었다. 기록이 남는 법인카드임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2007년 10~12월에 대체로 점심을 먹는 데 법인카드를 썼고 골프장에 간 것은 2번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8년엔 달라졌다. 총 29번에 걸쳐 1132만 원어치의 법인카드를 골프장에서 결제했다. 자주 간 곳은 경기 안산 상록의 제일CC, 경기 용인의 레이크힐스CC, 경기 안성의 골프클럽Q 등이었다. 2009년엔 14번 골프장을 방문했다.

단란주점을 방문한 횟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저녁 술자리가 늘었고 단순 음식점보다는 유흥주점을 방문하는 일이 잦아졌다. 2007년 말 석 달간 세 차례 방문했던 그의 단골 단란주점 'B'를 찾은 횟수는 2008년엔 20번으로 급증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는 위 기사에서 부산저축은행 김기현 고문이 2007년과 2008년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근거로 김 고문이 부산저축은행의 '로비 창구'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2007년 설립한 투자자문회사 'FRNIB'의 대표직도 맡고 있는 김 고문은 2007년 10~12월에는 대체로 점심을 먹는 데 법인카드를 썼고, 골프장에 간 것은 2번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골프장에서 모두 29차례에 걸쳐 1132만 원을 결제했다는 것이다. 단골 단란주점을 찾은 횟수도 2007년 10~12월에는 3차례였지만 2008년에는 20번으로 늘었다고 기사는 전했다.

기사대로라면 2008년도 골프장 1회 평균 사용비용은 39만 원이고 단란주점 출입 횟수는 월 평균 1.7회다.

법인카드 사용 빈도와 금액이 이 정도라면 당사자인 김 고문의 설명만으로도 의혹은 어느 정도 규명될 법한데 위 기사에는 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78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남 상 균

〈주문〉

스포츠조선 2011년 7월 16일자 19면 「소비자 고발/“못믿을 김정문 알로에” 소비자 빨났다」 제하의 기사, 7월 26일자 19면 「소비자 고발/팬택 스마트폰, 앱도 깔지 말라니…」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못믿을 김정문 알로에”…〉=『(주)김정문 알로에가 최근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이 회사의 기업윤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중략)

또 최연매 대표는 홈페이지의 ‘CEO 메시지 코너’를 통해 ‘항상 진정 고객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시장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주도하며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변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대표의 이런 경영철학도 겉으로만 생색내기 위한 멘트임이 이번 과대광고 건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 고객을 위한다는 생각보다 ‘돈벌이’에 급급하지 않고서는 ‘알로에’와 ‘방사능’을 연결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후략)』

〈팬택 스마트폰…〉=『(전략) 김씨가 겪었던 불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오작동과 기기 꺼짐이었다. 사용중 아무리 터치를 해도 반응이 없는, 소위 ‘먹통’이 되거나 갑자기 꺼진 뒤 재시동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중략)

이뿐만이 아니다. 베가X 유저들은 ‘OS(오퍼레이팅 시스템=운영업체) 업체

이트가 늦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쟁사의 스마트 폰들은 구·신기종 가릴 것 없이 벌써 최신 OS인 ‘진저브레드’ 업데이트를 시행했거나 정확한 시행 일자를 공고했지만 베가X는 여전히 하위 버전인 ‘프로요’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스포츠조선의 ‘소비자고발’이라는 기획연재물이다. 위에 적시한 기사들은 각각 김정문 알로에와 팬택 스마트 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한쪽 당사자인 김정문 알로에와 팬택 측에게 해명이나 답변의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79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 영 권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유 병 창
3.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주문〉

파이낸셜뉴스 2011년 8월 2일자 14면 「잇따른 구설수에 전경련 부회장 교체론 솔솔~」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8월 3일자 2면 「“그가 있는 한 전경련 희망없다”...정병철 전횡 논란/현안 해결은 뒷전 기업 위에서 주인행세...“상근 부회장 하나 관리 못하나” 허창수회장 리더십도 도마에」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8월 11일자 13면 「요직마다 자기사람 심고 감원도 무 자르듯 황포 일삼아/‘양철’ 전횡 목불인견」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파이낸셜뉴스)=『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의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다.

1일 복수의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정 상근부회장과 전경련 사무국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리더십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정 부회장의 지나친 독단과 사무국의 무기력이 산적한 재계 현안에 대처해야 하는 허창수 회장의 행보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지난달 28일 폭우에 따른 수재민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2011년 제주하계포럼’ 행사 중 하나인 골프대회를 전격 취소했다. 행사를 취소를 제주 현지에서 발표하면서 외부 참가자들을 제외한 전경련 임직원들은 골프를 치지 않는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다만, 회원사 참가자들은 이미 적지 않은 회비를 납부한 상태라며 일괄적인 불참을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양해까지 구했다.

확인 결과 공식대회는 취소됐으나 전경련 임직원 중 정병철 부회장과 이승철 전무는 라운딩을 강행했다. 정 부회장은 부인까지 대동하는 등 당초 일정 그대로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정식대회는 취소했지만 참가비가 아까워 개인적으로 골프를 치게 했다는 말을 듣고 행사 관계자들의 무신경에 놀랐다”며 “전경련이 얼마나 현실 대응에 안이한 지를 보여준다”고 개탄했다.(중략)

정 부회장이 회원사들의 요구사항이라며 ‘조직 슬림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국경제연구원의 구조조정 작업도 지지부진하다. 환경연 원장은 석달 넘게 공석이며, 전경련 ‘싱크탱크’인 환경연의 축소 방침에 대한 조직 내외의 반발을 누그러뜨리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상근부회장 교체 등 대대적인 전경련 쇄신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범LG그룹인 허창수(GS 회장)-정병철(전 LG CNS 사장)구도부터 바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008년 취임한 정 부회장은 그동안 언론과도 불편한 관계를 개선치 못하고 있다. ‘(비우호적인 언론사의) 기사실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는 등 언론과 잦은 분쟁의 장본인이기도 한 정 부회장에 대해 재계는 ‘시대착오적’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후략)』

(헤럴드경제)=『(전략) 문제는 전경련이 자기 개혁의 당위성을 못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새 회관을 지어 영원한 제국을 건설할 꿈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이 변화를 거부한다는 이 같은 비판의 정점에 정병철 상근부회장이 존재한다. 전경련 내부에 정통한 한 재계 인사는 “정 부회장은 전경련 조직을 자신의 치마폭에 두고 영원히 안주하려는 데만 관심이 있다”며 “그가 있는 한 전경련은 희망이 없다”고 단언한다.

실제 정 부회장의 행보는 독선에 가깝다. 최근 제주포럼에선 수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인까지 대동한 골프로 구설수에 올랐고, 지난해엔 ‘정부와의 대립 발언’ 소동 후 언론 등 주변과 철저히 소통을 거부하는 아집을 보였다. 한국경제연구원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연구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했다.

전경련이 3일 4대그룹 본부장과 정 부회장이 만나 1조원 규모의 사회공헌 재단을 만든다고 슬쩍 흘렸다가 기업들이 반발하자 모임을 취소하는 해프닝을 연출한 것도 정 부회장의 욕심이 발단이 됐다는 시각이다. 비판과 사퇴론에 직면한 그가 청와대는 물론 재계의 환심을 살 이슈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을 견제할 이가 없다보니 전경련 홍보실도 개인 ‘홍보맨’ 역할만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 실제 전경련이 제공하는 자료엔 대부분 정 부회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최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밴플리트’ 상을 받았을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악수를 하는 정 부회장 모습이 메인으로 전달됐을 정도다.

정 부회장의 독선과 전횡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별써 “상근부회장 하나 관리하지 못한다”며 리더십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4대그룹 한 임원은 “허 회장이 진정 재계를 위한다면 전경련 인적 쇄신부터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지난달 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에선 깊은 한숨 소리가 흘러 나왔다. 일명 ‘양철’로 불리는 정병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 겸 환경연 부회장과 이승철 전무가 휘두른 구조조정 칼날에 연구위원(박사) 2명과 행정지원 인력 8명이 짐을 쌌다.(중략)

전경련 안팎에서는 이 전무가 수차례 시행한 인사에서 소위 ‘양철 라인’이 요직을 차지하거나 발탁 승진을 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같은 인사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사무국이 ‘양철’의 사조직이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사무국 조직이 경직되고 관료화된 원인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중략)

지난 90년 환경연 연구위원으로 입사한 그는 99년 전경련 기획본부장으로 옮긴 뒤 조석래 당시 회장의 각별한 신임을 등에 업고 2007년 전무로 발탁됐다. 13년째 임원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에겐 전경련, 환경연의 고통분담은 ‘남의 얘기’다.

‘양철’ 가운데 하나인 정 부회장은 무능, 독선, 소통능력 부재, 비뚤어진 언론관 때문에 전경련 위상을 실추시키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LG전자 사장(CFO) 출신의 정 부회장은 재무통으로 숫자에 밝은 꼼꼼하고 꼬장꼬장한 성격의 소유자로 정평이 나있다. 하지만 정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기업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논객과는 거리가 멀다 보니 ‘재계의 입’인 전경련 상근 부회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현명관, 손병두 전 부회장과 비교하면 정 부회장의 존재감은 사실 없는 거나 다름없다는 게 재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한마디로 무능하다는 얘기다.(중략)

경박한 처신은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도 전경련 하계포럼에 참석한 그는 지난달 28일 수도권이 폭우로 큰 수해를 입고 수십명이 목숨을 잃어 전경련이 골프대회를 공식 취소했음에도 부인과 함께 골프를 즐겼다. 결국 그는 “재계

를 대표하는 전경련 상근 부회장의 본분을 망각한 것은 물론 반(反)기업 정서를 심화시키는 경거망동을 했다”는 비판여론을 불러 일으켰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병철 상근부회장이 독단·독선적인 처신 등으로 사퇴 여론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세 신문들은 정 부회장이 얼마 전 제주도 전경련 포럼에 참석했다가 심각한 수재 때문에 골프행사가 공식적으로 취소됐음에도 부인까지 대동해 골프를 친 사실 등을 독단적 처신의 구체적인 사례로 문제 삼았다.

서울경제는 여기에다 정 부회장과 함께 전경련의 ‘양철’로 불리는 이승철 전무도 요직에 자기 사람을 앉히는 등 ‘인사전횡’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위 기사 내용은 당사자의 명예와 직결되는 것인데도 세 신문들은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을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035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문〉

서울경제 2012년 3월 5일자 A2면 「아우디 ‘가격만 명차’/짚은 고장·정비 센터 부족 등 서비스 엉망… 고객만족 수년째 최하위」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중소기업 임원 A씨는 지난해 말 아우디코리아의 서초 지역 딜러를 맡고 있는 AM모터스의 B본부장으로부터 차량 구입 제의를 받았다. B씨는 “내가 타고 있는 A6를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데 관심 있느냐”며 “회사에서 모르게 해야 하니 돈은 개인 계좌로 입금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의심쩍기는 했지만 브랜드의 명성과 본부장급 딜러 B씨를 믿고 지난해 11월께 3차례에 걸쳐 모두 4,0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차량을 받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A씨는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알고 보니 B씨는 이미 회사를 그만두고 잠적한 상태. A씨는 AM모터스와 아우디코리아에 수 차례 도움을 청했지만 양측은 “법인 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본인 잘못”이라며 묵살했다. A씨는 “딜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딜러사와 본사의 책임은 없냐”고 항변했지만 본사에서는 “법대로 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MW·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 독일 3대 명차라고 주장하는 아우디에 대한 고객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명품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차량 품질에 딜러 교육과 사후 서비스마저 엉망인데 아우디코리아는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인 마케팅인사이트가 지난해 신차 구입 소비자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아우디는 지난 2007년부터 줄곧 수입 브랜드 중 ‘꼴찌’를 기록했다. 최근 1년간 AS 만족도에서도 아우디는 1,000점 만점에 749점으로 독일 명차로 분류되는 BMW·메르세데스-벤츠는 물론이고 폭스바겐·푸조 등 유럽 대중 브랜드에도 밀려 순위표 가장 아래에 처박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소비자 불만 건수도 마찬가지다. 판매량 대비 아우디의 불만 건수는 2010년 최하위, 지난해에는 겨우 꼴찌를 면했다. 명품의 경우 소비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우디는 관리에는 소홀하고 판매에만 열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아우디 고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떨어지는 내구성이다. 사소한 고장으로 정비센터를 찾는 일이 많다는 것. 지난해 말 뉴 A6를 구입한 C씨는 “출고 이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엔진 결함으로 AS를 받았고 1년도 안 돼 정비를 맡긴 것만 3번째라 차만 보면 열불이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족한 정비센터도 한몫한다. 아우디코리아는 전국 19곳의 서비스센터에 157개의 작업대를 갖추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한국수입자동차협회 기준) 아우디 차량은 총 4만6,998대로 작업대 1개당 299대를 맡아야 한다. BMW(MINI 포함, 204대)나 메르세데스-벤츠(271대)에 비해 크게 부족해 정비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리고 있다.

반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는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위의 수입차 가격 및 판매망 등에 대한 조사에서 아우디 코리아는 신속히 국내 로펌과 공조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차업체의 한 관계자는 “아우디 판매량이 최근 갑자기 늘면서 기본적인 고객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수입차 전체 이미지를 먹칠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위 기사에서 독일산 수입차인 아우디가 잦은 고장에다 부실한 서비스, 딜러 관리 소홀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아우디는 자동차 전문 리서치회사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수입차 가운데 2007년 이후 줄곧 ‘꼴찌’를 기록했고,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소비자 불만 건수에서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사는 시종 아우디의 잘못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 일관했지만 당사자인 아우디측에게는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답변의 기회〉를 위반한 다른 기사들

(www.ikpec.or.kr 참조)

결정번호	신문사명	게재일	내용	결정
2011-1109	경기신문	11 04 01	“주민 밥줄 끊는 공공기관 횡포”/포천시 ...	주의
2011-1128	기호일보	11 05 12	경기복지재단 인사비리 의혹	주의
	蔚山每日	11 05 16	“난개발 부채질하는 양산시”	”
2011-1155	충청투데이	11 06 01	대덕구 지역갈등 부추기나	주의
	경기일보	11 06 07	짜 막힌 경인고속도 나 몰라라/道公, 돈벌이만 ‘급급’	”
2011-1156	대구신문	11 06 01	“달서구청, 규정 몰라 혈세 낭비”	주의
	기호일보	11 06 10	“LH만 배불리고 입주자가 비용 부담”	”
	인천신문	11 06 20	시흥시 논곡동 무허가 공장 단속 무마 핑계	”
2011-1158	헤럴드경제	11 06 16	6번씩 들락날락... 度님은 경기도 人事	주의
2011-1180	내일신문	11 08 09	천호식품 불법경품행사로 소비자 현혹	주의
2011-1181	충청투데이	11 07 08	송촌체육공원 애초부터 설계 잘못	주의
	中都日報	11 07 11	“일방적인 약속파기” 대덕구 분노	”
	경북도민일보	11 07 13	타 지자체 포기한 화력발전소, 포항이 왜?	”
2011-1182	인천신문	11 08 08	시흥시 공무원 눈·귀 막는다	주의
	새전북신문	11 08 09	벽성대, 영터리 학위장사에 불법교육장 운영	”
2011-1205	한라일보	11 08 19	행정기관 인터넷신문고 ‘폐쇄적’	주의
2011-1220	경향신문	11 10 03	‘현인택 밥값’/1년간 8500만원...	주의
2011-1221	머니투데이	11 10 11	부산상의 회장 선거 ‘충성서약’ 논란	주의
2011-1222	경남신문	11 09 30	김해시 경전철대책 ‘줄속’	주의
	大田日報	11 10 04	대전시 무역전시관 매입 ‘꼼수’ 빈축	”
	奎羅日報	11 10 12	승용차보다 비싼 초호화 주차장	”
2011-1223	인천일보	11 10 05	사농고 쓰지 않는 콘도 회원권	주의
	경남매일	11 10 10	국내 농업기반 스스로 허무는 그들은 누구?	”
	전북중앙신문	11 10 10	전북대 병원 돈벌이 급급	”
2011-1224	奎光日報	11 10 13	나주시 인사행정 또 ‘말썽’	주의
2011-1251	한국일보	11 10 27	건보 통합 반대했던 사람이 공단 이사장 되나	주의
2011-1252	東亞日報	11 11 05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때 수억살포 의혹	주의
2011-1253	부산일보	11 11 03	발표만 있고 대책은 없는 기장군 대형사업	주의
	경기일보	11 11 08	간호조무사가 경기영어마을 주치의?	”
2011-1254	경기신문	11 11 08 외	“영어마을 사무총장 퇴출해라” 외	주의
2011-1273	영남일보	11 12 06	대구시 ‘사후관리 포기’ 들통	주의
2011-1274	경남매일	11 12 09	진주시의원 소유업체 ‘특혜’ 의혹	주의
	인천일보	11 12 09	시흥시장 ‘삭감 예산 부활대책’ 지시 논란	”
2012-1003	충청투데이	12 01 06	지역팬 안중에도 없는 삼성화재	주의

결정번호	신문사명	게재일	내용	결정
2012-1004	충청타임즈	12 01 09	'문화없는' 천안문화재단	주의
	忠淸日報	12 01 12	도립교향악단 바꾸기/'마이동풍' 충북도 비난	〃
2012-1019	세계일보	12 01 30	軍 골프장 'OB'/예비역·일반인 차지...	주의
2012-1021	大田日報	12 02 07	교과부 신고없이 빌딩임대사업 백석대	주의
	부산일보	12 02 07	'돛구장' 풍산, 해운대 미래 전략까지 주물럭	〃
2012-1033	중부일보	12 02 29 외	"외유탕진 혈세 3천만원 환수하라" 외	주의

## 5. 보도자료의 검증

### ▲ 2011-111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 영 권

#### 〈주문〉

머니투데이 2011년 4월 9일자 13면 「호쾌한 질주·정숙한 실내... 두 얼굴의 매력/■ 한국GM '캡티바」 기사와 제목, 파이낸셜뉴스 4월 14일자 19면 「가솔린 엔진 'SUV 소음' 떨쳐내/스포티지R 터보 GDI」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머니투데이와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머니투데이)=『한국GM이 쉐보레 브랜드로 국내시장에 첫 출시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캡티바'는 야누스적 매력을 가진 차다.

공격적인 전면부 디자인과 오프로드도 거침없이 내달을 듯한 동력 성능에 서는 터프한 '짐승남'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하지만 날렵하게 빠진 측면 디자

인과 가솔린 세단에 버금가는 정숙성을 떠올려 보면 영락없는 ‘도시남자’다. 캡티바(Captiva)라는 모델명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시선을 잡아끈다는 뜻의 ‘캡처(capture)’에서 따온 신조어다.(중략)

상반된 느낌을 받으며 운전석에 올라탔다. 디젤엔진 특유의 우렁차고 육중한 시동음이 들리며 만만찮은 기세로 내달릴 것을 예고한다. 가속페달에 발을 올려놓자 조금 굽뜨게 움직이는 듯하더니 이내 거침없이 앞으로 튀어나간다. 가속력은 중소형 세단 못지않게 빠르지만 느낌은 다르다. 오프로드에서 속력을 내도 무방할 만큼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가속감이다.(중략)

남성적인 호쾌한 달리기 성능을 보이지만 정숙성은 세단 못지않았다. 가솔린 엔진이라 해도 믿을 만큼 디젤 특유의 엔진 소음은 주행 중 거의 들리지 않았다.(후략)』

(파이낸셜뉴스)=『스포티지R는 힘이 좋은 야생마와 같다. 기존 스포티지보다 높이에서는 낮아지고 폭은 넓어진 스포티지R는 마치 출발신호를 기다리는 야생마와 같았다. 출발 신호와 함께 힘껏 치고 나가는 힘은 스포츠카에도 뒤지지 않았다.

최근 스포티지R 터보 GDI(T-GDI)를 주행했다. 6년만의 풀체인지 모델이었다. 콤팩트한 디자인은 도시형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이라는 개발 콘셉트를 그대로 보여줬다.(중략)

차에 올랐다. 기존 SUV보다 아늑하면서 편안했다.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었을 때의 느낌이다. 시동을 켜 후 시동소리를 들었다. SUV 특유의 ‘덜덜’거리는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주행 중에도 비슷했다. 디젤엔진의 한계를 가진 스포티지R에 비해 터보 GDI 모델은 가솔린을 사용함으로써 정숙성이 한층 좋아졌다. 가속 페달에 발을 올리자 차가 시원하게 앞으로 나갔다. 순간 치고 나가는 힘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중략)

안정장치도 최상이었다. 스티어링 휠(운전대)을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텔레스코픽,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해주는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돼 있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특정 국산차의 시승기로, 감성적이고도 홍보성 짙은 문구를 곁들여 문제점 지적은 전혀 없이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검증된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해당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 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항(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40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종 승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5.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문〉

머니투데이 2011년 4월 23일자 13면 「가솔린 SUV의 매력...‘소음·진동·힘’ 다 잡았다/■닛산 ‘무라노’」 기사와 제목, 서울경제 4월 25일자 A17면 「세련된 디자인·편안한 승차감 “옛지 있네”/●BMW 신형 X3」 기사와 제목, 한국일보 4월 26일자 23면 「올뉴 인피니티 M37/핸들링 정교하고 폭발적 주행 압권」 기사와 제목, 매일경제 5월 3일자 B7면 「CO2 배출 줄인 럭셔리 세단/동급모델보다 연비·출력 UP/메르세데스-벤츠 뉴S500 블루이피션시 룡」 기사와 제목, 朝鮮日報 5월 11일자 C2면 「기아차 ‘스포티지R 터보GDI’ 타보니.../스포츠카 같은 속도감에 안정감도 ‘굿」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기사들은 새로 시장에 나왔거나 화제가 되고 있는 국산차와 수입차들의 시승기이다. 기사들은 차량의 장·단점을 두루 지적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나 감성적 표현을 사용하여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항(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42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문〉

東亞日報 2011년 4월 25일자 B7면 「아파트 미리보기/현대건설 ‘죽전 힐스테이트 테라스하우스’/테라스는 마당!/123㎡ 면적에 파티-텃밭 활용 가능/디자인은 예술!/그리스 신전 닮은 외관에 5베이 구조」 기사와 제목, 5월 2일자 B7면 「아파트 미리보기/포스코건설 인천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집안은 첨단/스마트폰으로 가전 제어/집밖은 공원/축구장 2.5배 넓이 갖춰」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4월 25일자〉=『현대건설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타운하우스 ‘죽전 힐스테이트 테라스하우스’를 분양한다. 이 타운하우스는 지하 1층~지상 3층 4개동에 공급면적 △232㎡ 18채 △233㎡ 12채 △238㎡ 6채 △237㎡ 1

채 등 37채로 구성됐으며 계약과 동시에 입주가 가능하다.

죽전 힐스테이트 테라스하우스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웬만한 단독 주택 마당보다 넓은 123m<sup>2</sup> 면적의 테라스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곳은 파티나 일광욕, 골프 퍼팅 등을 즐길 수 있으며 텃밭을 꾸미거나 테이블을 놓고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사실상 마당”이라며 “힐스테이트 테라스하우스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중간 형태”라고 소개했다.

건물 디자인도 눈에 띈다. 디자인 전문 업체인 홍콩 LWK는 이 타운하우스의 외관을 유럽의 궁전처럼 이국적으로 설계했으며 각 주택의 테라스는 그리스 신전의 제단처럼 디자인했다. 건물 지붕의 이음새나 면, 굴곡은 전통 한옥의 지붕을 형상화했으며 소나무숲, 공원과 잘 어울리는 단지 내 산책로도 궁궐 산책로와 분위기가 비슷하다.(후략)』

〈5월 2일자〉=『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5공구 Rc3블록에서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 아파트를 분양한다.(중략)

포스코건설은 낮은 건폐율로 넉넉하게 확보된 공간을 테마파크처럼 꾸몄다. 단지 한가운데에는 축구장 2.5개 크기의 중앙공원을 마련하고 이곳에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과 생태공간, 주민 커뮤니티 시설들을 들여놨다. 또 1km가 넘는 산책로와 자전거 전용도로, 어린이 놀이터 5개, 휴게소 4개 등 송도 내 단일 아파트 중 가장 큰 규모의 녹지공간과 부대시설을 갖췄다는 게 포스코건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파트 내부로 들어서면 첨단, 그린 기술이 눈길을 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안 내 가전제품과 조명 등을 작동할 수 있으며 에너지 사용량, 부재중 방문자, 택배 도착 여부, 가족 차량 도착 여부 등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차장 출입구와 현관문을 카드 한 장으로 여닫을 수 있는 ‘원패스 시스템(One pass System)’도 갖췄다. 전기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해 주차장에는 가정 내 단말기(월패드)와 스마트폰으로 충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도 설치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은 위 기사에서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각각 분양 중인 특정 타운하우스와 아파트를 감성적인 제목과 홍보성 짙은 문구·대형사진을 곁들여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검증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특정업체가 알리고 싶어 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려 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항(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43 신문윤리강령 위반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주문〉

머니투데이 2011년 5월 14일자 12면 「아늑함...아름다움...박력...‘하늘 언덕’의 18색 모험/■롯데스카이힐 김해CC」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머니투데이는 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 매봉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림 같은 풍경 속에 위치한 롯데스카이힐은 이름 그대로 ‘하늘 언덕’ 같은 몽환적인 매력을 지녔다. 롯데스카이힐은 자신만의 분명한 색깔을 지닌 곳이기도 하다. 클럽하우스는 고전적이고 단아하다. 전체 골프장을 조망해보면 전체적으로 차분한 인상을 준다. 동반자들과

여유있게 라운딩하면서 품격있게 즐기기에 이만한 곳도 드물다 싶다.(중략)

전장 6500m(7108야드)에 달하는 코스로서 그린은 벤트그라스를 식재했다. 티잉그라운드 페어웨이 러프는 켄터키블루그라스로 조성돼 사계절 내내 푸른 잔디에서 라운드가 가능하다. 자연환경도 대단히 좋은 편이다. 여름에는 매봉산에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쾌적하게 라운딩할 수 있으며 겨울에도 제주도보다 평균기온이 2도 정도 높다. 눈이 오는 날 외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것도 롯데스카이힐만의 장점이다.(중략)

골프장 서비스에서도 롯데스카이힐은 대단히 우수한 편이다. 지난해 3월 국내 최초로 '골프장 서비스부문 KS 인증'을 획득했다.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골프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롯데스카이힐은 다른 골프장과 차원을 달리한다.(중략)

롯데스카이힐 경주는 오래된 벚처럼 친근하면서도 품격있다. 여유로운 라운딩 후에 작품을 감상하면서 동반자들과 한담을 나누노라면 어느덧 시간은 느릿한 그림자가 돼 사람들 뒤에 숨어 있을 것이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위 기사에서 롯데스카이힐 김해CC라는 특정 골프장을 광고 카피를 연상케 하는 감성 어린 제목에다 홍보성 짙은 문구를 곁들여 장점 일변도로 크게 소개했다.

이 같은 기사는 독자들에게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홍보를 도울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항(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4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서울일보 발행인 최 경 수
2. 전남매일 발행인 신 용 호

〈주문〉

서울일보 2011년 5월 3일자 14면 「요통치료 봉약침요법 ‘으뜸’」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5월 9일자 13면 「■개원 100일 맞은 ‘세계로 365병원’/“전문 메디컬타운 신개념 진료 펼칠 터”/양·한방 어우러진 최고 관절 전문병원/고품질 서비스·실력 갖춰 환자들 호평」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일보 전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일보)=『대부분의 성인들이 한번쯤 겪어봤다는 요통은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이 경험한다는 흔한 질병이다.

요통의 원인은 단순한 인대 손상이나 근육통에서부터 퇴행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추간관 탈출증 등 척추의 이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봉침, 약침요법 전문 경희술 한의원 김효진 원장은 “한방에서의 요통치료는 약침이 가장 좋고 그 중 ‘봉침’을 으뜸으로 친다”며 “약침요법은 내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외과 등의 영역에 다양하게 응용되는데 특히 요통치료에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중략)

▲약침요법 중 봉약침이 으뜸

이러한 약침 중 요통의 한의학적 치료로는 봉약침요법을 으뜸으로 꼽는다. 경희술 한의원 김효진 원장은 “봉약침은 꿀벌의 독낭에서 봉독을 추출해 침자리 혈에 놓는 시술법으로 벌침에 함유된 성분의 탁월한 염증 및 통증제거, 정혈작용, 면역강화 효능과 안전성은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중략)

김원장은 “치료과정 중에 술을 마시게 되면 치료효과가 현저히 감소함으로 가능한 음주는 금해야 하고, 특히 봉침 치료를 받은 날은 절대 술을 삼가야 한다”며 “평소에 요통체조나 수영 등으로 허리나 배의 근육을 보강하면 도움된다”고 조언했다.』

(전남매일)=『개원 100일을 맞이한 세계로 365병원은 동아병원의 축적된 경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고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추어 정형외과 관절 전문병원으로 거듭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최고의 친절과 감성이 어우러져 환자 중심의 앞서가는 초일류 병원 구현을 목표로 관절센터, 척추센터, 외상센터, 소화기센터 등 전문 진료센터 운영을 통해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재훈 원장을 만났다.

- 광주지역 신도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광산구 수완지구에 정형외과 관절전문, 소화기전문 병원을 개원했다. 이 곳을 선택한 이유와 개원하게 된 동기는.

▲지난 95년 동아병원을 개원하여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해 병원경영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제 시대의 발전에 발맞추어 의료서비스를 추구하는 환자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개념 의료서비스를 펼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곳에 정형외과전문, 소화기전문 병원인 세계로365병원을 통해 세계 수준의 진료를 365일 제공하는 한편, 전문화된 한방병원과 전문화된 개인병원들이 입주하는 세계로메디칼타운을 조성하여 전문화메디칼 콤플렉스라는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신개념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자들은 이곳에서 양방과 한방을 아우르고, 개원들도 전문화된 진료를 제공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후략)』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위 서울일보 기사는 본문의 핵심 내용과 다르게 제목을 편집한 이유로 3월 회의에서 ‘주의’ 결정을 받은 같은 신문 3월 7일자 18면 <요통, 봉침 등 한방

치료 ‘으뜸’ 기사와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똑같다.

이번 기사는 3월 기사 내용에 약침의 종류와 봉침 치료 중 주의할 점을 설명한 세 단락을 추가하고 제목을 <요통치료 봉약침요법 ‘으뜸’>이라고 달아 57일 만에 재차 게재한 것이다.

요컨대 “요통의 한방치료법 중 봉침의 효능이 가장 뛰어나다”는 동일한 내용을 제목과 취재기자의 이름만 바꾼 채 두 달도 안 되는 동안에 두 번씩이나 소개함으로써 특정 치료법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결과를 낳았다.

전남매일 위 기사는 개원 100일을 맞은 특정 전문병원을 ‘최고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춰’ ‘최고의 친절과 감성이 어우러져’ ‘초일류 병원 구현을 목표로’ 등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여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또 ‘광산구 수완지구에 전문병원을 개원한 이유’ ‘병원경영의 성공 원칙’ 등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특정 병원의 병원장이 들려주고 싶어 하는 얘기들을 여과 없이 알리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특정 의료기관이 알려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성 기사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항(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1-121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호남매일 발행인 김 준 수
2. 대구신문 발행인 김 경 발

#### 〈주문〉

호남매일 2011년 9월 6일자 5면 「KT&G ‘에세멘솔 1mg’ 출시/천연 멘솔 적용 청량감 뛰어나」 제하의 기사, 대구신문 9월 7일자 12면 「KT&G 대구본부 ‘에세멘솔 1mg’ 출시」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호남매일 대구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호남매일)=『담배, ‘에세멘솔 1mg(ESSE Menthol 1mg)’이 출시된다.

에세멘솔 1mg에 적용된 ‘멘사 파이프리티타(Mentha Piperita)’는 멘솔 정제 과정에서 극소량만 추출되는 고급 천연 멘솔로 일반적인 멘솔 제품에 적용된 멘솔향보다 청량감과 향 발현이 뛰어나다. 또한 에세멘솔 1mg은 멘솔 함유량을 높여 저타르이면서도 동시에 진한 천연의 멘솔 향을 구현했다.

KT&G 브랜드부장 이창우는 “에세멘솔 1mg은 강한 멘솔 향의 초슬림담배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담배”라며 “에세 특유의 깔끔한 맛과 천연 프리미엄 멘솔향의 업그레이드된 청량감과 향 발현이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고 말했다.(후략)』

(대구신문)=『고급 천연 멘솔을 적용한 멘솔(Menthol) 담배인 ‘에세멘솔 1mg(ESSE Menthol 1mg)’이 출시된다.

KT&G 대구본부는 초슬림 담배 판매율이 높은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7일부터 판매되는 에세멘솔 1mg에 적용된 ‘멘사 파이프리티타(Mentha Piperita)’가 멘솔 정제 과정에서 극소량만 추출되는 고급 천연 멘솔로 일반적인 멘솔 제품에 적용된 멘솔향보다 청량감과 향 발현이 뛰어나다고 밝혔다.

또 에세멘솔 1mg은 멘솔 함유량을 높여 저타르이면서도 동시에 진한 천연의 멘솔 향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후략)』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담배는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호식품이어서 담배사업법 제18조 4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 2항, 3항에 의거하여 신제품 출시를 알리는 광고에도 제품명, 소비자가격, 함량, 포장구분만 표시하도록 엄격하게 그 홍보

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 기사들은 KT&G가 최근 시판한 담배 ‘에세멘솔 1mg’을 소개하면서 “저타르이면서도 동시에 진한 천연의 멘솔 향을 구현했다” “에세 특유의 깔끔한 맛과 천연 프리미엄 멘솔향의 업그레이드된 청량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등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옮긴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맛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담배를 일반 식품처럼 맛을 강조하면서 장점 일변도로 자세하게 보도한 것은 현행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마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항(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1-1233 신문윤리강령 위반

#####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 〈주문〉

내일신문 2011년 9월 30일자 15면 「서울우유, 치즈산업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 제하의 기사 가운데 「나트륨은 낮추고, 영양은 높였다/국내 최저 나트륨 함량 ‘유기농 양광 치즈’ 4종 출시」 및 「치즈 본연의 맛과 풍미가 일품/자연치즈 함량 최고 ‘웰작(Well作) 체다’·고다치즈」 기사의 제목, 10월 6일자 16면 「간·대장·눈 지켜주는 음료들」 기사와 제목, 10월 7일자 16면 「‘애플루트 W 베이비우유’ 인기」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유기농 양팡 치즈)=『(전략) 서울우유(조합장 송용헌)가 국내 치즈 중 나트륨 함유량이 가장 낮은 ‘유기농 양팡 치즈’ 제품 라인 4종을 새롭게 선보여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새로 출시된 ‘유기농 양팡 치즈’는 각 제품별 1회 제공량당 나트륨 함량이 국내 최저라는 점이다.(중략)

뿐만 아니라 ‘유기농 양팡 치즈’는 아기의 성장에 맞게 월령별 필요한 영양을 강화해 국내 아기 치즈 중 유일하게 4단계로 제품을 세분화해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아기의 월령대에 맞춰 스텝1~스텝3으로 구성된 ‘유기농 양팡 아기 치즈’와 스텝4 ‘유기농 양팡 어린이 치즈’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중략)

이 밖에도 ‘유기농 양팡 치즈’는 유기농 함량을 95%부터 최대 96.4%까지 높임으로써 어린 영유아들이 보다 안심하고 치즈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후략)』

(‘웰작(Well作) 체다’· 고다 치즈)=『서울우유가 선보인 자연치즈 함량이 국내 가공 치즈 중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웰작(Well作)체다’ 치즈도 인기를 얻고 있다.

웰작 체다 치즈의 자연치즈 함유량은 83%로 2011년 4월 제품에 표시된 기준으로 국내 체다 치즈 중에서 가장 높다. 자연치즈 함량이 높은 만큼 일반 가공치즈에서 느낄 수 없는 잘 숙성된 부드러운 조직감과 깊고 진한 풍미를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웰작 고다 치즈 역시 자연 치즈 함량이 80%에 달한다.

새로 선보인 웰작 치즈 2종은 웰빙(wellbeing) 명작(名作)을 합쳐 웰작(Well作)이라는 제품명으로 태어났다. 제품명에서도 나타나 듯 건강을 위해 색소 및 합성보존료를 일체 첨가하지 않았으며 나트륨 함량도 대폭 낮췄다.(후략)』

\* 10월 6일자 및 10월 7일자 기사 생략



<내일신문 2011년 9월 30일자 15면>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은 서울우유가 최근 선보인 '유기농 양광 치즈'와 '왓자체다 치즈'라는 특정제품을 위 적시 기사 2건에다 제품 모델 소개 기사('아기치즈 고르는 방법' 광고 캠페인)와 담당간부 인터뷰 기사 등 모두 4건의 기사를 한 면에 대대적으로 소개했다.

기사는 <나트륨 함량이 국내 최저> <자연치즈 함량이 국내 가공치즈 중 가장 많아> 등 최상급 표현에다 홍보성 문구를 곁들여 장점 소개로 일관했고 해당제품 사진도 함께 실었다.

또 10월 6일자와 7일자 기사는 건강보조식품인 음료 상품들과 특정업체의

신제품 우유를 각각 다루면서 기사 전체를 일방적인 홍보성 내용으로 채웠다. 더욱이 음료상품들을 다룬 기사는 ‘간·대장·눈 지켜주는 음료들’이라는 제목을 달아 마치 이 음료상품들이 간과 대장, 눈의 건강에 의학적 효험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나, 이런 표현은 관련 규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들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검증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특정 업체가 알리고 싶어 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성 기사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항 (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다른 기사들

(www.ikpec.or.kr 참조)

결정번호	신문사명	게재일	내용	결정
2011-1118	매일경제	11 04 05	「상품장터」 관련 기사	주의
	파이낸셜뉴스	11 04 13	「‘웨딩시즌’ 혼수용품 알뜰하게 장만하세요」 제하 기획기사들	”
	국민일보	11 04 14	「식음료 특집」 관련 기사	”
	머니투데이	11 04 15	「봄철 건강 파수꾼」 관련 기사	”
2011-1119	서울일보	11 04 06 외	「아파트 실속 구매 지금이 ‘적기」 외	주의
2011-1141	서울경제	11 04 22	「건강한 봄나기」 관련 기사	주의
	국민일보	11 04 25	「“놓치면 후회!” 봄바람 타고 알짜 분양 쏟아져」 관련 기사	”
	머니투데이	11 04 27	「오월 감사의 달 선물들」 관련 기사	”
	파이낸셜뉴스	11 04 27	「물오른 봄 분양시장」 관련 기사	”
	스포츠동아	11 04 28	「가정의 달 선물특집」 관련 기사	”
	헤럴드경제	11 04 28	「손보사 신상품」 관련 기사	”
	문화일보	11 05 03	「건강만한 효자 있나요?」 관련 기사	”
2011-1145	대구신문	11 05 11	「범어숲 화성파크드림 S」 외	주의
2011-1169	문화일보	11 05 25	「누구나 탈 수 없기에…」 외	주의
	朝鮮日報	11 05 25	짐승 같은 660마력…/페라리 첫 4인승…	”
	머니투데이	11 06 04	양증맞은 외모…달릴 땀 ‘스포츠키’ 타는 듯	”
	매일경제	11 06 14	나는 달리기 위해 태어났다/람보르기니…	”
2011-1170	내일신문	11 06 09	똑똑한 힐스테이트, 관리비도 줄여주네	주의
	매일경제	11 06 09	동의의료원 양한방 협진 감히 최고라고…」	”

결정번호	신문사명	게재일	내용	결정
2011-1711	中都日報	11 05 31 외	「명품 주거단지서 누리는 '과학벨트 프리미엄」 외	주의
	충청투데이	11 06 01 외	「...“내가 꿈꾸던 전원아파트” 외	”
	중부매일	11 06 06	과학벨트 배후단지/대전 노은 '꿈에그린'	”
2011-1172	忠淸日報	11 06 07	친환경·명품 주거중심...대전 랜드마크 '우뚝'	주의
	전남매일	11 06 20	세라젠 '필란화장품' 셀프 피부관리실	”
2011-1173	국민일보	11 05 25	「톱브랜드 특집」 관련 기사	주의
	헤럴드경제	11 05 27 외	「파워코리아」 섹션 외	”
	머니투데이	11 06 09 외	「활력 보충 건강한 여름나기」 관련 기사 외	”
	서울경제	11 06 14	「삶의 질 높이는 건강관리」 관련 기사	”
2011-1193	머니투데이	11 07 23 외	「시승기/2012년형 체어맨W」 외	주의
	스포츠동아	11 07 28	움직이는 집무실.../뉴체어맨W V8 5000 시승해보니	”
	스포츠경향	11 07 29	시승기/뉴체어맨W/턱서리 뒷좌석...세계명차 뺄치네	”
2011-1193	일간스포츠	11 08 02	뉴체어맨W, 에쿠스 제치나	”
2011-1194	헤럴드경제	11 07 19	넓어진 실내 승차감 업그레이드	주의
	東亞日報	11 07 21	시승기 아우디 'A8L W12'	”
	매일경제	11 07 26	「변치않는 우아함.../렉서스 ES350」 외	”
	한국경제	11 07 26	최첨단 편의장치.../닛산 2012년형 'GT-R'	”
	중앙일보	11 07 27	광야의 '질주자'.../폴크스바겐 신형 '투아렉' 시승기	”
	세계일보	11 08 09	캐딜락 CTS 쿠페·렉서스 CT200h 타보니	”
2011-1195	경향신문	11 07 19	「알뜰바캉스 출발!」 관련 기사	주의
	국민일보	11 07 19	「고종황제가 즐겼던 궁중냉면/농심 등지방면」 등	”
	머니투데이	11 07 20	「AMORE PACIFIC/LG Fashion/LG생활건강/오비맥주」 등	”
	파이낸셜뉴스	11 07 22 외	「Cooool~ 바캉스 갈땀 챙기세요」 관련 기사 등	”
	헤럴드경제	11 07 25 외	「더위사냥」 관련 기사 등	”
2011-1196	스포츠조선	11 07 22	'오륙도 바다'를 배란다에서 본다	주의
	내일신문	11 07 26	빙그레 아카페라, 향·맛 앞세워 인기몰이	”
2011-1197	파이낸셜뉴스	11 07 25	시원한 고원서 여름 골프 진수 맛보세요/롯데스카이힐 성주CC	주의
	머니투데이	11 08 05	나주호 바라보며 절벽서 '티샷'/아찔한 손맛 매혹되다/전남 골드레이크 CC	”
2011-1198	경북일보	11 07 26	청정자연 빼닮은 명품 필드...나도 여기선 '전설의 골퍼'	주의
2011-1199	경기신문	11 08 10	인터뷰/유희석 아주대병원장/"아주대병원 도내 첫 JCI 인증 획득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주의

결정번호	신문사명	게재일	내용	결정
2011-1212	중앙일보	11 08 30	귀족풍 외모에 나긋한 몸놀림/르노삼성 신형 SM7 시승기	주의
	한국경제	11 08 30	1억원대 스포츠세단 '뉴 아우디 A7' '올 뉴 재규어XJ 3.0D' 경쟁 접화	"
	문화일보	11 08 31	넓고 안락한 실내 공간/160km/h 달려도 '조용'/닛산 '무라노' 시승기	"
	서울경제	11 09 05	시승기 아우디 '뉴 A6' 크라이슬러 '올 뉴 300C'	"
	파이낸셜뉴스	11 09 05	시승기 현대자동차 i40	"
	세계일보	11 09 06	「폴크스바겐 투아렉 시승기」 등	"
2011-1213	파이낸셜뉴스	11 08 30	은행 카드 보험 속이 팍 찬 '금융 3형제'... 관련 기사	주의
	헤럴드경제	11 09 08	「비전코리아」 섹션	"
	머니투데이	11 09 09	「유통가 가을맞이 상품전」 관련 기사 외	"
2011-1214	내일신문	11 09 15	교보생명의 효도보험, '행복한준비보험'	주의
2011-1216	충청타임즈	11 09 07	'함암작용 규명' 오메가3 관심 고조	주의
2011-1234	한국경제	11 10 03	국내최고급 시니어타운 '더 클래식 500' 가뵈더니	주의
2011-1235	머니투데이	11 10 01	시승기 아우디 'A8L W12'	주의
	헤럴드경제	11 10 04	군살 없는 근육질의 '준마'	"
	세계일보	11 10 11	아우디 '뉴 A6' 시승기	"
	朝鮮日報	11 10 12	폴크스바겐 신형 '티구안 2.0TDI' 타보니...	"
2011-1236	한국경제	11 09 28	일동 후디스 초유제품 '돌풍' 외	주의
	국민일보	11 09 30	「라푸마 소품 강화 트레이킹화」 관련 기사	"
	머니투데이	11 09 30 외	「가을 집 단장」 관련 기사 외	"
	파이낸셜뉴스	11 09 30	「'착한' 정기적금의 재발견」 관련 기사 외	"
	서울경제	11 10 12	「자기주도 학습」 관련 기사 외	"
2011-1237	경기신문	11 10 04	거품 속 뺀 '착한 분양가' 중소형 대단지 '새바람'	주의
2011-1260	동아일보	11 11 09	11일 국내 출시 아이폰4S, '콩글리시' 기자가 음성인식 서비스 직접 체험해보니	주의
2011-1261	스포츠경향	11 10 25 외	「전통식품의 스마트한 진화」 외	주의
	일간스포츠	11 10 25 외	「상큼 아이유, 섹시 유이, 우아한 손담비...다운 재킷 하나로 스타일 업」 외	"
	스포츠동아	11 10 26	KB 국민카드와 함께하는 즐거운 카드 라이프	"
	스포츠서울	11 10 28	다운재킷 화려하게, 역동적으로 '고메치처럼'	"
	스포츠조선	11 11 03 외	「외국인 환자에겐 통역도...'친절한 안세병원」」 외	"
2011-1262	서울경제	11 11 10	"두도식품 명품액것으로 한식 세계화 앞장설 것"/강무웅 (주)흙 회장	주의

결정번호	신문사명	게재일	내용	결정
2011-1263	매일경제	11 11 01	「4가지 운전모드 장착한 ‘팔방미인’/BMW 535i x Drive」 외	주의
	머니투데이	11 11 05	4도어 스포츠쿠페 명차/성능 · 외모 ‘놀라운 변신’/벤츠 ‘신형 CLS’	”
	朝鮮日報	11 11 09	차라면 당연히 세단? 현대차의 i시리즈가 확 바꿨다	”
	파이낸셜뉴스	11 11 16	소음 줄고 연비 업그레이드/혼다 9세대 시빅	”
2011-1264	파이낸셜뉴스	11 10 24 외	「건자재 시장, 고부가가치 하이엔드 제품 인기」 관련 기사 외	주의
	헤럴드경제	11 10 24 외	「별종들의 세상’ 일등 상품 · 일등 시장엔 3가지가 있다」 관련 기사 외	”
	머니투데이	11 11 09 외	「추위 녹이는 겨울상품」 관련 기사 외	”
2011-1265	경기신문	11 11 09	수원장례식장 ‘사랑 나눔’... 新 장례문화 이끈다	주의
2011-1282	스포츠조선	11 11 30	LG Electronics/4G시대 ‘LG로 통한다	주의
	스포츠경향	11 12 06	「‘부츠의 계절’ 패셔니스타 되는 코디법은」 외	”
2011-1282	일간스포츠	11 12 09	상하이 조니워커 하우스 가보니/오묘한 블렌딩...위 스키의 멋에 취하다	주의
	머니투데이	11 12 08	‘웰빙’으로 짝찬 만두... 실적도 빵빵/동원F&B 개성 왕만두	”
2011-1283	머니투데이	11 12 03	이 덩치에 연비가 18km/T자 직각주차도 자동으로/시승기 ■ 폭스바겐 ‘뉴티구안’	주의
	매일경제	11 12 06	6년만에 나온 ‘BMW3’/급가속 때도 바닥에 붙은 듯 ‘안정’	”
	東亞日報	11 12 06	덩치 키지고 더 편해진 ‘그’가 온다/BMW 뉴 3시리즈	”
	내일신문	11 12 07	한국GM, 국내시장 두자릿수 점유율 자신/글로벌 중형 세단 ‘말리부’/준대형 하이브리드 ‘알페온 e어시스트’	”
	서울경제	11 12 08	60km대 구간서도 날렵하게/급코너 돌 때 롤링 거의 없어/시승기 ● 뉴 인피니티 G25 럭셔리’	”
2011-1284	파이낸셜뉴스	11 11 25	「따뜻한 겨울산행 떠난다/나만의 스타일 갖추고...」 관련 기사 외	주의
	헤럴드경제	11 11 28	「주목받는 연금펀드」 관련 기사 외	”
	머니투데이	11 12 03 외	「로피시엘 음모 스타일」 관련 기사 외	”
2012-1009	세계일보	12 01 03	주행시 소음과 떨림 거의 느껴지지 않아/아우디 ‘뉴 A7’ 타보니	주의
	스포츠동아	12 01 07	내 마음을 훔친 ‘BMW’	”
	매일경제	12 01 10	「미끈한 외모, 더 스포츠카답다/최대 350마력, 질주 본능 자극/더 뉴 제네시스 쿠페 380GT」 외	”
	문화일보	12 01 11	고속에도 세단처럼...승차감마저 갖춘 랜드로버/‘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시승기	”
2012-1010	머니투데이	12 01 11 외	「임진년 ‘건강지킴이」」 관련 기사 외	주의

결정번호	신문사명	게재일	내용	결정
2012-1011	전북중앙신문	12 01 04	“42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건설경기 활성화 견인”/플러스건설 나춘균사장	”
2012-1027	파이낸셜뉴스	12 01 25	날렵한 몸체 스포츠카 연상/하이브리드 최상 연비 구현/시승기 한국도요타 뉴 캠리	주의
	朝鮮日報	12 01 27	페달 살짝 밟아도 시속 100km로 치고 나가는 야생마/벤츠 ‘더 뉴 SLK200 블루이퍼션시’	”
	매일경제	12 01 31	세련미에 조용함까지/렉서스라해도 믿겠네/도요타 뉴 캠리	”
	문화일보	12 02 01	인체공학적 공간…고속 코너 구간에서도 안정감/토요타 ‘뉴캠리’ 시승기	”
	서울경제	12 02 02	7,000만원대 BMW 미니 롤스로이스 옷 입다/미니 굿우드’ 세계 1,000대 한정 판매 내달부터 예약	”
	머니투데이	12 02 04	심장 바꾼 ‘BMW M550d’ 출력도 연비도 놀라워라	”
2012-1028	서울경제	12 01 27 외	「겨울 건강 챙기기」 관련 기사 외	주의
	머니투데이	12 01 28 외	「로피시엘 옴 스타일」 관련 기사 외	”
	국민일보	12 02 09	「졸업 · 입학선물특집」 관련 기사	”
2012-1029	일간스포츠	12 01 27	혀, ‘고현정 화장품’ 나오자마자 완판	주의
	스포츠경향	12 02 07	밸런타인데이 ‘맛있는 유혹’ 어때요/CJ푸드빌 특별 이벤트	”
	스포츠조선	12 02 08	세계 첫 입안서 녹여먹는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에스’	”
2012-1030	中都日報	12 02 02	‘교육+편의+입지’ 행복도시 맞춤형 프리미엄 누리세요/세종 엠코타운/내일 견본 주택 오픈	주의
	충청투데이	12 02 03	알뜰 공간 활용 돋보이는 자연친화적 아파트/‘세종 엠코타운’ 전용 59 · 84㎡ 1940가구 분양 돌입	”
2012-1044	파이낸셜뉴스	12 02 23	우유 넣어도 커피 맛은 깊네/맥심 화이트 골드	주의
2012-1045	서울경제	12 02 23	「근육질 라인에 남성미 물씬/메르세데스-벤츠 ‘뉴 CLS63AMG’ 외	주의
	매일경제	12 02 28	스포츠세단의 카리스마 ‘6세대 BMW3시리즈’/우아한 질주…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
	파이낸셜뉴스	12 02 28	시원한 시야 확보 · 다양한 수납공간 갖춰/기아자동차 ‘레이’	”
	헤럴드경제	12 02 28	길이 5m 무게 2t 묵직한 위용/2000cc 심장이 믿기지 않는다/포드 익스플로러 2.0	”
	머니투데이	12 03 10	시속 20km부터 질주본능이 깨어난다/벤츠 ‘더 뉴 SLK200 블루이퍼션시’	”
	중앙일보	12 03 15	트럭의 넉넉함+SUV의 편리=SUT<스포츠유틸리티트럭>/쌍용 코란도스포츠	”

결정번호	신문사명	게재일	내용	결정
2012-1046	내일신문	12 02 24	불황에도 잘 나가는 유통가 효자상품」 관련 기사	주의
	파이낸셜뉴스	12 02 27 외	「혼수 생활가전...신부의 마음을 잡아라」 관련 기사 외	”
	헤럴드경제	12 02 27 외	「히트예감 상품」 관련 기사 외	”
	머니투데이	12 02 29 외	「겨울잠 자는 입맛 깨우세요」 관련 기사 외	”
2012-1047	스포츠서울	12 02 24	‘魚메이징!’ 지상에 새로운 바다가 펼쳐진다/한화호텔 & 5월 여수-7월 제주에 아쿠아폴라넷 개장	주의
	스포츠조선	12 03 14	봄바람 타고 직장인 러닝족 급증...‘초경량’ 러닝화가 대세/‘박태환-손연재 신발’ 인기 이유있네!	”
2012-1048	경기일보	12 02 29	“어르신 건강... 내 가족처럼 돌봐요”	주의
	경북도민일보	12 03 07	「‘포항e병원’ 고령사회의 동반자로 ‘우뚝’·「인터뷰/포항e병원 장성호 이사장/“병원 들어서는 순간부터 행복을 느껴야지요”」	”
2012-1049	중부매일	12 03 12	“카~” 술은 역시 ‘참이슬’/충북 주류판매량 60% 점유율 기록	주의
	경북일보	12 03 15	높은 미래가치 장점... 대단지 프리미엄은 ‘덤’/건설명가 우방 야심작 ‘올하 아이유셀’ 16일 공개	”
2012-1050	충청타임즈	12 03 09	‘지웰시티’ 청주서 2차 분양	주의